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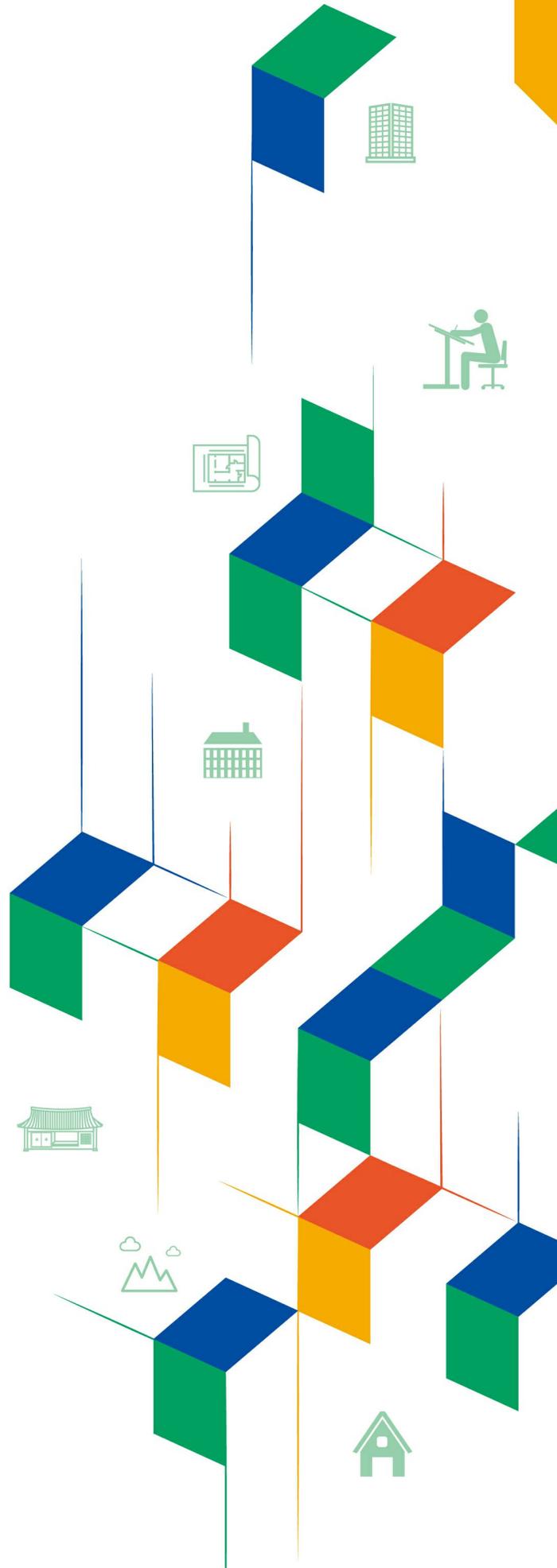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76-6480000-000288-01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 요약본

2021-2025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경상남도에서 의뢰한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0년 10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박 소 현

수행기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책임 연구진	김영현	연구위원
	조상규	선임연구위원
	윤호선	연구위원
	문보람	연구위원
	유예슬	연구위원
	지석환	연구위원
	이경신	연구위원
	이예린	연구위원
	연구보조원	주찬영
손혜민		연구보조원

협동기관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조형규	교수

전문가 TF	건축디자인	
	이장민	인제대학교
	권영민	창원문성대학교
	김동진	경상대학교
	나인혜	오브라이비건축사사무소
	서정석	무위건축사사무소

스마트·녹색·산업	
최정민	창원대학교
신상화	한국국제대학교
강호근	경남도립거창대학교
김정훈	영남대학교
배종열	시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교육	
김재석	건축사사무소 고평
강재중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유진상	창원대학교
양승훈	경남대학교
윤난실	경상남도청

경상남도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민현식	건축사사무소 기오현
위원	윤인국	경상남도청
	윤난실	경상남도청
	유진상	창원대학교
	이연중	김해토건(주)
	유방근	경상대학교
	박진석	경남대학교
	이지은	토지구택연구원
	강재중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종석	청보 건축사사무소
	구선주	구우 건축사사무소
	이보람	경남연구원
	유석연	서울시립대학교
	권현주	부산대학교
	이태경	부산대학교
	신영욱	경상남도의회
	송부용	경남연구원
	양승훈	경남대학교

발주기관	경상남도청	
	윤인국	도시교통국장
	최진희	건축주택과장
	문덕섭	사무관
	이원중	주무관
	최연이	주무관

본 연구보고서는 경상남도의 의뢰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수행한 학술연구 용역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 용역」의 최종 성과품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경상남도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I. 계획의 개요	1
1.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1
2. 계획범위 및 구성.....	2
3. 계획수립 방법과 과정.....	5
II. 건축·도시 관련 계획 및 정책 현황	7
1. 상위 및 관련 계획.....	7
2. 경상남도 제1차 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	15
III. 경상남도 건축·도시환경의 여건변화와 미래전망	16
1. 메가트렌드 변화와 건축정책.....	16
2. 포스트코로나 및 그린뉴딜에 대한 대응.....	18
3. 경상남도 건축·도시 현황과 이슈.....	19
4. 경상남도 도민 및 전문가 인식.....	23
5. 권역별 현황과 이슈.....	27
6. 경상남도의 현황과 정책방향.....	30
IV. 비전 및 목표 설정	34
1. 계획방향 및 과제도출 과정.....	34
2.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 비전 및 주요내용.....	38
3. 정책목표별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39

V.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42

전략 1.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건축·도시디자인 구현..... 42

 실천과제 1.1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생활공간 개선..... 43

 실천과제 1.2 누구에게나 안전한 건축·도시환경..... 45

전략 2. 복합화로 다시 쓰는 공공공간 조성..... 48

 실천과제 2.1. 노후·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활성화..... 49

 실천과제 2.2 저이용 공공건축 복합화를 통한 생활SOC 확충..... 53

전략 3. 기후변화에 지속가능한 스마트·녹색건축 조성..... 55

 실천과제 3.1 경남형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스마트·녹색건축물 보급..... 56

 실천과제 3.2 기후변화에 적응력을 갖춘 건축·공간환경 조성..... 59

전략 4. 지역 건축역량 강화 및 건축행정 선진화..... 62

 실천과제 4.1 경상남도 미래 건축시장의 경쟁력과 다양성 확보..... 63

 실천과제 4.2 효율적인 건축행정기반 구축..... 65

전략 5. 경남 건축자산을 활용한 지역정체성 확보..... 69

 실천과제 5.1 건축자산의 체계적 보존과 진흥을 위한 기틀 마련..... 70

 실천과제 5.2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자산과 한옥의 자원화..... 73

전략 6. 소통하고 참여하는 건축문화 기회 확대..... 76

 실천과제 6.1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행사 및 교육 확대..... 77

 실천과제 6.2 문화와 경관이 어우러지는 경상남도 장소 형성..... 79

VI. 실행계획..... 83

1. 중장기 추진계획..... 83

2. 세부 추진계획..... 84

3. 지자체별 추진계획..... 90

4. 성과관리 계획..... 92

건축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부합하고 지역 여건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을 반영하는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1.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및 법적근거

○ 「건축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한 계획으로 법적 의무 이행

- 「건축기본법」 제12조와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 현황과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기본계획 수립
-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부합하고, 지역여건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건축기본법 제12조)

○ 지역 고유의 가치를 지속하고 새로운 건축·도시 패러다임을 반영한 비전 제시

- 남해안의 다도해를 이룬 천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고려하고, 풍부한 지역 건축 자산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건축문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체계적 계획 필요
- 디자인경쟁력의 시대를 맞이하여 건축 생산과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 품격을 추구하는 시대로 전환

○ 변화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가치 창출을 위한 계획 수립

- 건축기본법 시행으로 기존의 공급위주 건축·도시정책에서 새로운 건축의 이념과 공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 도래
- 관계 법령의 제·개정과 법정계획의 증가로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위상과 역할, 관계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 증대
- 고령화 사회, 저출산, 여가시간 증대 등 인구, 사회, 경제, 환경, 문화적 여건변화와 미래를 대비하는 건축정책 필요

《 법적근거 》

(건축기본법 제12조) ① 시·도지사는 지역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되는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광역건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군구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초건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계획 수립 목적

- 경상남도 건축도시의 비전 및 정책 방향 설정
- 국내·외 건축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고려한 건축정책 기본구상
- 지역 현황과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 수립
- 도, 사군의 건축도시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방향성 제시

2. 계획범위 및 구성

□ 계획범위

- (공간적 범위)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해당하는 총 10,532km²



○ (시간적 범위) (단기) 2021~2025년(5년), (장기) 2021~2030년(10년)

- 5년 단위의 광역건축기본계획으로서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는 성격에 따라 단기 및 중·장기과제로 구분

* 건축 관련 기초조사는 2019년을 기준년도로 설정하고, 자료 획득이 곤란하거나 최근 자료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확보 가능한 최근시점을 기준으로 함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의 시간적 범위]

○ (내용적 범위) 「건축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건축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한 건축기본계획 내용]

건축기본법 제11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도 건축기본계획의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6.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9.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10.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선도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1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시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 5.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도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8.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건축기본법시행령 제3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에 대한 국민 교육과 홍보 2.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 5.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의결한 사항 	

□ 계획의 구조

- 본 계획은 최상위 비전과 목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추진전략, 그리고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실천과제와 세부단위과제로 구성
 - (비전 및 정책목표) 경상남도 건축정책의 장기 비전 달성을 위해 지행해야할 기본 목표
 - (추진전략) 현행 건축도시환경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 (실천과제) 추진방향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실천계획



[계획의 구성 및 주요내용]

□ 계획수립 추진절차



[계획수립 추진절차]

3. 계획수립 방법과 과정

□ 계획수립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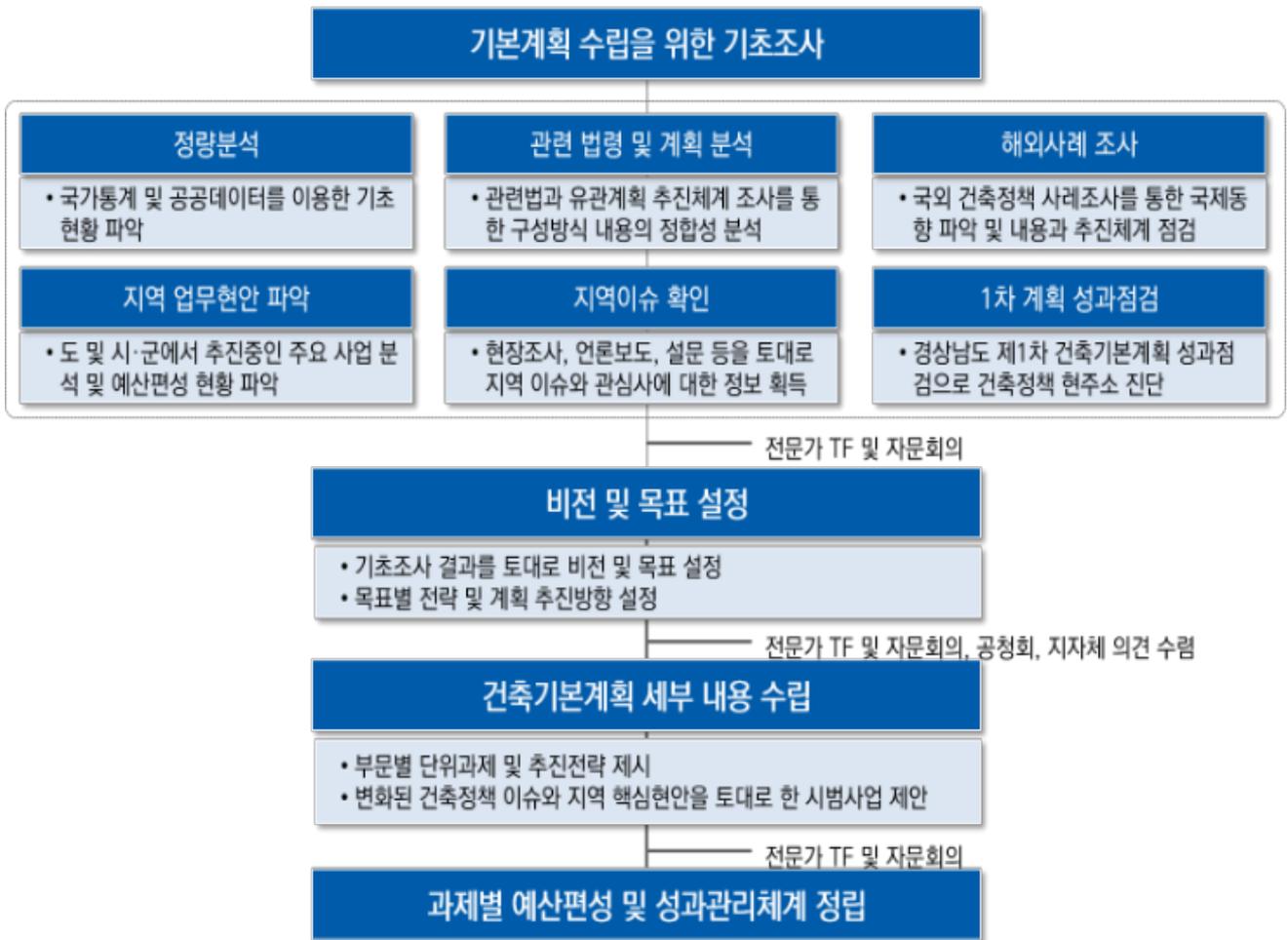
- 국가승인통계, 공공데이터 및 기관 보유 데이터를 활용한 기초현황 분석
- 건축정책 주요이슈 및 실천과제별 해외사례 및 동향 분석
- 내부행정자료를 이용한 지역 주요현안 파악
- 현장 중심형 조사를 통한 지역 이슈 파악
- 도민 및 실무자 대상 인식조사 및 업무협의를 통한 다각적 의견수렴
- 전문가 TF 구성·운영
 - 건축·도시·인문학 분야의 산·학·연·관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정기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기본계획 방향 설정
 - 전문가 TF는 총괄분과 및 계획부문별 ‘건축디자인’, ‘녹색·스마트·산업’, ‘건축문화·교육’의 3개 분과로 구분하여 운영
 - (분과별 TFT) 경상남도 공공건축가 및 지역건축사회 실무진을 포함한 전문가5인과 간사 2인(건축도시공간연구소+창원대)으로 구성
 - (총괄분과 TFT) 분과별 팀장 참여로 의견 취합 및 분과 간 의견 조정 수행



[경상남도 지역전문가 TF팀 구성 및 운영체계]

□ 계획수립 과정

- 다양한 데이터와 통계정보를 조사수집하고, 관련법과 관련계획 및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구상하고 역할과 의의 정립
- 건축기본계획의 성격과 위상을 설정한 후 기초조사 결과와 지역현안 상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당면과제를 파악하고 비전 및 부문별 목표 도출
- 1차 계획 성과점검, 전문가 TF, 지자체 의견수렴, 공청회를 통한 지역 도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부문별 세부 계획을 도출하고 타당성 검토
- 경상남도 도정 전략 및 주요 추진과제, 중앙부처 및 국가에서 추진 중인 국정 과제와 정책사업을 토대로 시범사업을 제안하고 이행을 위한 로드맵과 성과 관리체계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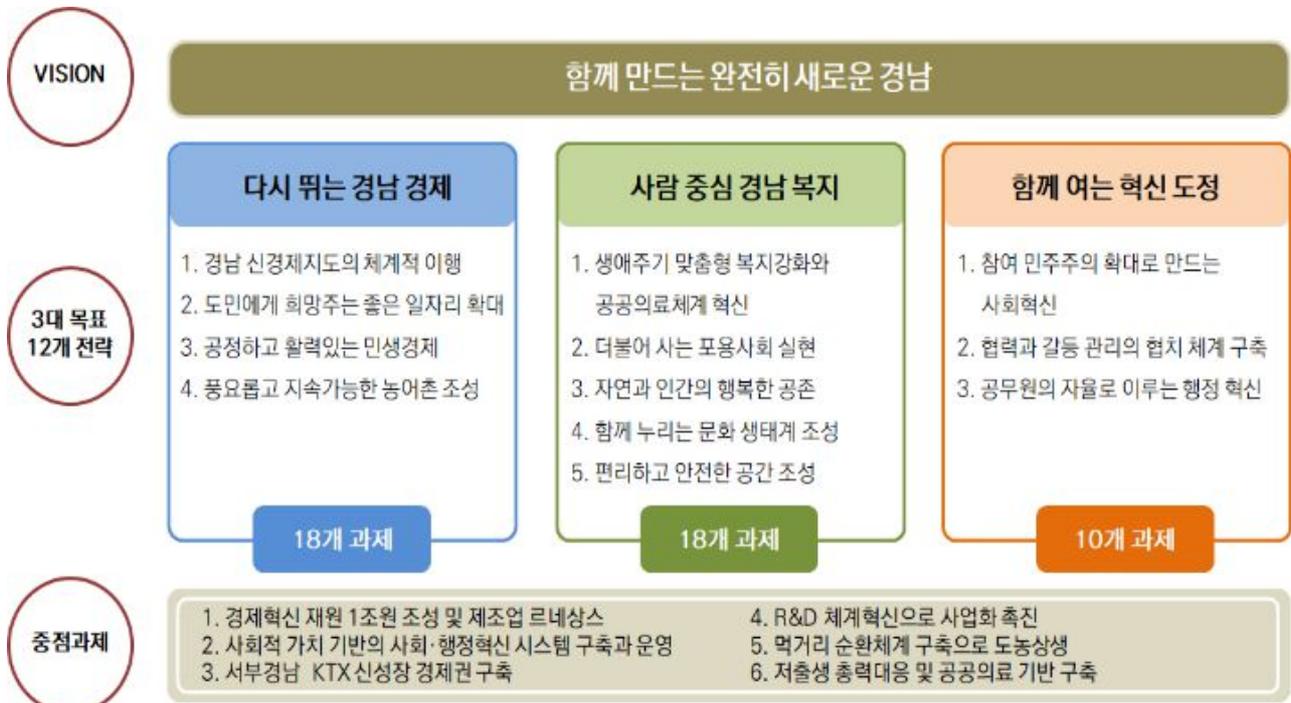


[제2차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절차]

1. 상위 및 관련 계획

□ 도정 비전 및 전략

- 도정4개년계획은비전-운영원리-목표-전략-과제의운영체계를바탕으로정책과제와 중점과제를 제시
- (도정 4개년 운영 원칙) ‘소통과 참여’, ‘공정과 포용’, ‘실용과 혁신’ 3가지 운영원리
 - 공정하고 포용적인 자세로 소통에 참여하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겠다는 도정의 방향과 기본 원칙
- (계획 주요 내용)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비전으로 3대 목표, 12개 전략 46개 추진과제로 구성



[경상남도 도정비전 및 목표]

□ 경상남도 건축·도시 관련 계획 및 정책 현황

○ 계획간 상호 연계되어야 하는 7개 관련 계획을 분석하여 계획의 정합성 고려

[경상남도 건축·도시 관련 제도 및 계획수립 현황]

계획명	근거법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계획 수립 목적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국토기본법	경상남도전역	기준연도	2012	상생협력의 혁신적인 지역발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중장기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설정
			목표연도	2020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부산·전남·경남 해안선에 연접한 35개 기초자치단체	기준연도	2010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외개방 거점지대를 육성하고 지역간 협력 및 통합적 개발을 통해 동·서간 지역갈등을 극복하고 화합과 상생발전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
			목표연도	2020	
경상남도광역 건축 기본계획	건축기본법	경상남도전역	기준연도	2013	건축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 및 광역단위의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면서 경상남도 내 품격 높은 건축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여건 및특성을 고려한 건축기본계획 수립 필요
			목표연도	2017	
경상남도남해안권 경관기본계획	경관법 (경상남도 경관조례)	경상남도 남해안권	기준연도	2008	도차원에서 남해안 지역에 대한 경관단위를 설정하고 경관방향과 컨셉을 부여한 뒤, 이를 시군별로 자율성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경관계획과 가이드라인이 필요
			목표연도	2020	
경상남도중부내륙 경관기본계획	경관법 (경상남도 경관조례)	경상남도 중부내륙	기준연도	2009	경상남도 중부내륙 지역의 통일성 있는 경관을 형성하고, 도차원에서 중부내륙 지역에 대한 경관단위를 설정하고 경관방향과 컨셉을 부여한 뒤, 이를 시·군별로 자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경관계획이 필요함
			목표연도	2020	
경상남도 공공디자인기본계획	경관법 (경상남도 경관조례)	경상남도전역	기준연도	2013	경관관련 선행계획인 '중부내륙 경관기본계획'과 '남해안 경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공공디자인의 방향 제시
			목표연도	2022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경상남도전역	기준연도	2017	녹색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을 통해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개발을 통해 건축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
			목표연도	2021	

□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 건축기본법을 근거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5)과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6.11)을 수립
-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을 비전으로 행복한 건축실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대비를 3대 목표를 설정하고 9개 추진전략과 26개 중점 실천과제, 73개 단위실천과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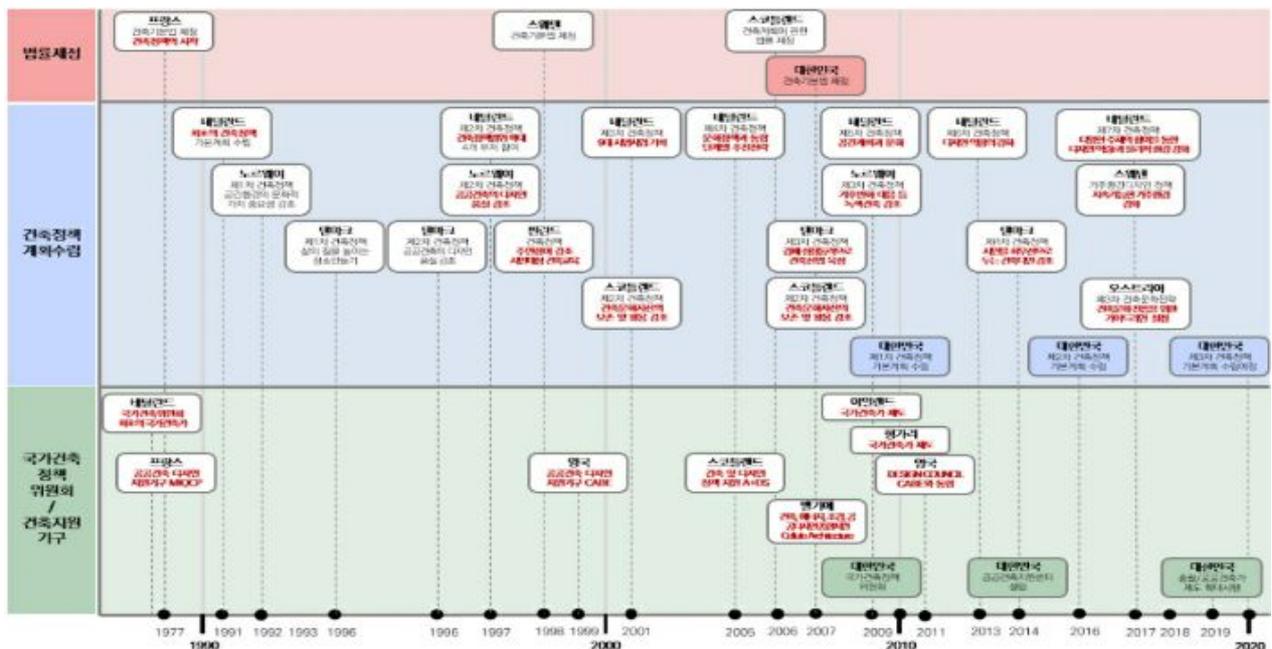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성]

○ 건축정책의 주요성과와 의미

- 건축을 ‘민간자산의 건축’ 보다는 ‘국가자산으로서의 건축’으로 건축기본법의 근본 취지인 ‘건축의 공공성’ 구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자는 합일된 건축계 전문가들의 공감대 형성
- 건축기본법 구성에 따라 계획수립, 위원회 구성, 건축문화 재정지원, 건축디자인 기준, 시범사업 등 추진

[건축기본법 실행수단에 따른 성과와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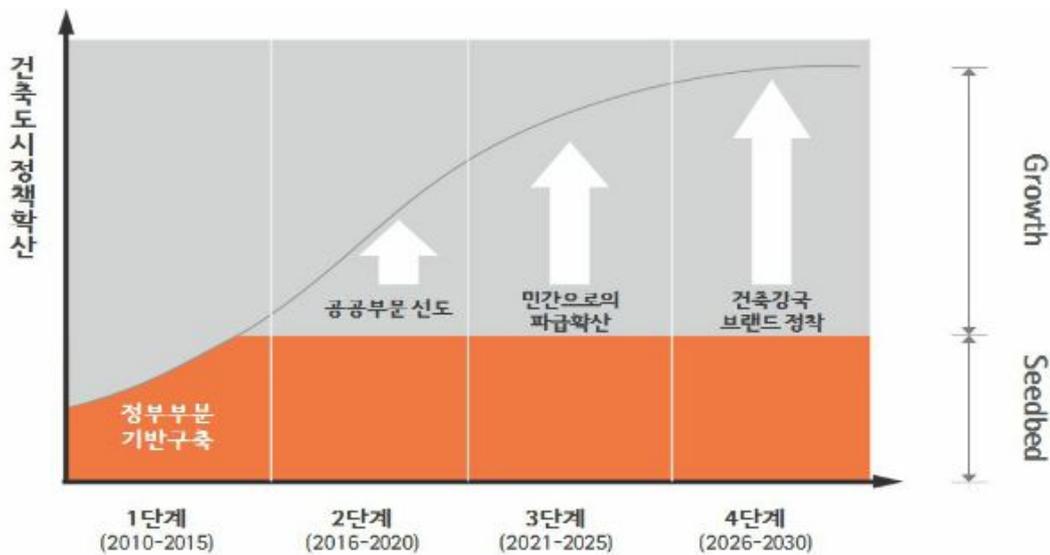
건축기본법 실행수단	1차 성과	2차 성과	3차 성과
기본계획수립 (제10~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 17개 광역시·도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관련 법령 제정의 근거 마련 • 건축정책지원기구 설립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도시재생 특별법, 건축자산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제정 • 공공건축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기구, 국가한옥센터 설립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구성 (제10~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운영 (1기~5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정책 심의, 조정의 기능 • 건축정책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창구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정책을 단일부처 업무가 아닌 범부처 업무로 정책범위 확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진흥원 설립 근거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의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문화행사, 교육, 신진건축사 육성, 전문인력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건축기금 조성 근거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기획업무, 사전검토제도 운영 기준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도시재생 활력 사업 등 시범사업 운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프로세스 개선으로 인한 민간 전문가 활용 확대 • 건축발주제도, 사후관리제도 개선 등 건축품질 향상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 신진건축가 육성 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을 통한 지역건축 및 도시 환경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역량 향상



[국내외 주요 건축정책 비교]

□ 중장기 계획목표에 따른 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방향

- 세계적인 건축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
 - (1차 계획) 녹색 건축·도시 기반구축, 2010~2015
 - (2차 계획) 제도 기반의 공공부문 선도, 2016~2020
 - **(3차 계획) 민간 파급·확산기, 2021~2025**
 - (4차 계획) 세계 건축강국 실현, 2026~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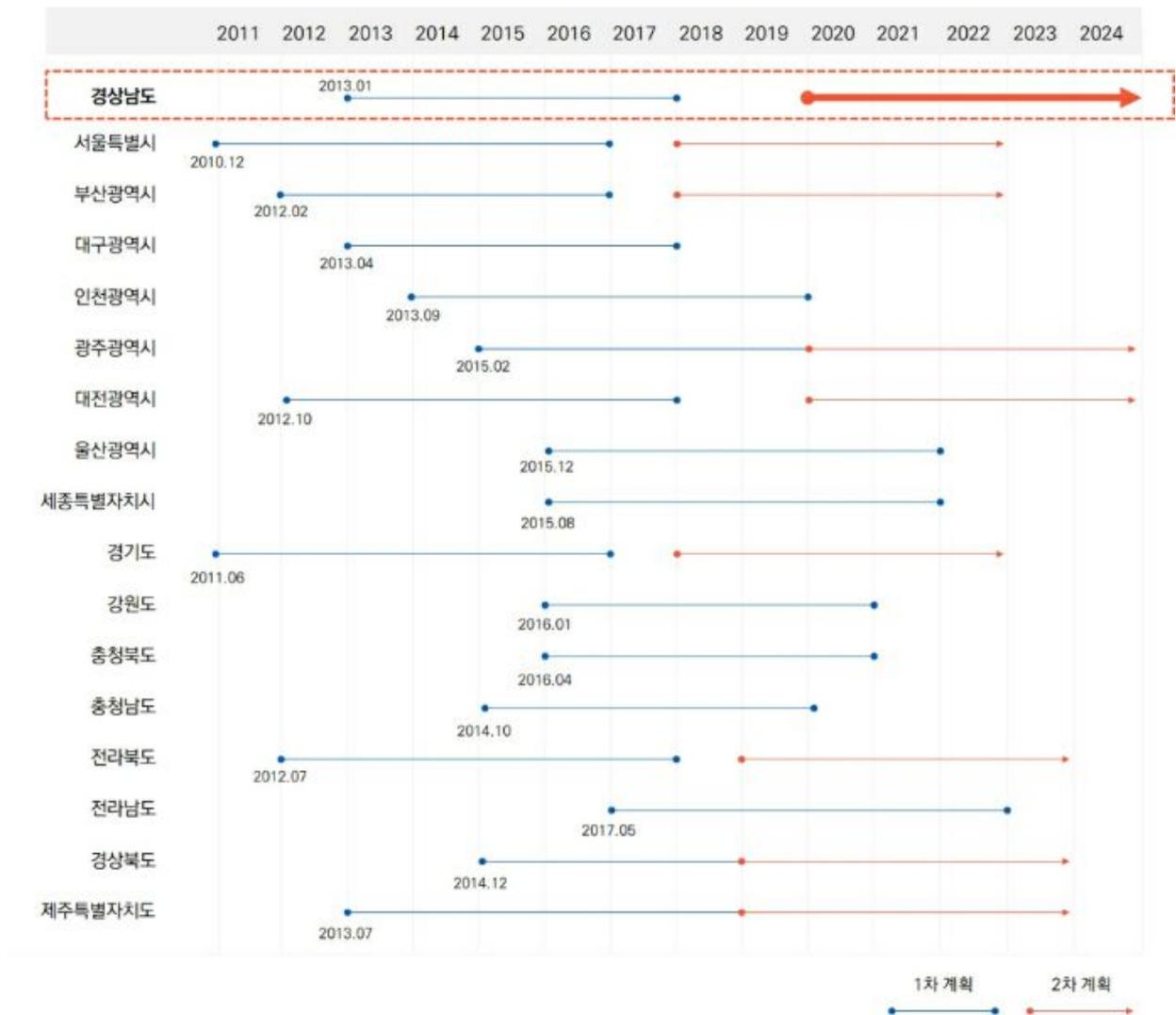


[건축정책기본계획 단계별 추진전략]

- (지역 건축역량 강화) 국가단위 건축정책에 비해 지역 건축기본계획의 실행은 다소 미흡해 실제 체감되는 파급효과와 인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건축정책의 역량강화가 필요한 시점
- (우수 민간건축 확산) 그간 건축정책을 통해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매년 확대 보급하였으며 정책효과를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민간건축물이 보다 확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규모 동네 공공건축물의 보급과 제대로 된 민간건축 설계시장 조성 필요
- (사회변화 선제적 대응)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재난 증가, 4차산업 도래 등 건축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트렌드를 반영해 사회변화에 따른 건축정책의 선제적 대응 필요

□ 타 지역 건축기본계획 수립현황과 특징

- 1차 계획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수립 완료 하였으며, 현재 제2차 계획 수립을 추진 중
 - 2차 계획 수립 완료 : 서울, 경기, 부산, 전북, 경북, 제주
 - 2차 계획 수립 중 : 경남, 대전, 광주, 울산, 충남, 충북, 강원, 인천
- (계획 실행체계의 특성) 대부분 단중장기의 단계별 계획 목표를 설정하고, 5년 내에 시행 가능한 과제 구분
- (구성체계) 대체적으로 국가단위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부합하기 위해 3대 목표 체계 유지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시행 경과]

□ 지역건축기본계획의 평가 및 한계

○ 일반적·형식적인 기초조사로 인한 지역 현안 파악 부족

- 기초조사 및 현황조사의 내용이 일반적·형식적 조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역 내 건축물의 단순한 물량파악이 아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필요

○ 부족한 지역 예산으로 인한 지역별 차별화된 계획 수립의 어려움

- 대부분의 지자체는 한정된 예산상황으로 인해 지역단위의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보다는 예산소요가 적거나 불필요한 ‘조례제정’, ‘계획 기준 및 지침’, ‘교육’ 부문에 중점을 둔 경우가 다수
-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국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
 - *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도시재생사업, 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에 공통적으로 과제가 편성되어 있어 지자체간 차별화 측면에서 한계
- 지자체에서 예산 확보가 된 추진 예정인 사업내용을 보완하는 과제 발굴도 중요

○ 지역건축기본계획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성격의 사업 및 과제 발굴

- 과제 추진주체 및 성격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과제’와 ‘지역 차원에서의 과제’로 분리할 필요
 - * ‘관련 법령간의 연계·통합 과제’, ‘공동주택 디자인심의에 관한 과제’, ‘도시재생 정립에 관한 과제’, ‘건축산업 육성’ 등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지원해야 하는 정책으로 지자체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들도 상당부분 계획에 포함
- 따라서, ‘국가 계획에 따라 지역차원에서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지침을 설정해야 하는 과제’와 ‘국가 정책방향에 부합하여 지역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시범사업을 발굴하는 과제’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

○ 계획 수립과정에 지자체 행정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필요

- 지역건축기본계획의 계획수립기간은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 1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
 - * 계획수립 주체로 별도의 전문연구기관에 학술연구용역 형태로 발주하고, 계획과정에 지역 전문가를 다수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 그러나 계획이 실행되고 추진하는 것은 지역 시·군 기초지자체 및 관련부서 실무자의 의지와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
- * 매년 지자체 예산계획 수립과정에서 건축기본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부서 실무자의 경우, 기본계획의 내용 자체를 인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실정

□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건축정책을 선행한 유럽 주요국의 정책내용을 분석해 보면 국내의 건축정책과는 달리 다루고 있는 정책대상이 ‘건축문화’, ‘공공건축’, ‘건축기술’에 중점
 - * ‘건축’의 범위를 축소하는 의미가 아닌 그동안 소외되고, 정책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부문에 대해 초점을 두어 건축기본계획만의 차별성을 가질 필요
-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목적달성은 특정 시설과 공간에 대한 계획이 아닌 법규, 행정프로세스, 설계발주 및 계약, 지침 및 기준, 건축기술, 교육 등 정책수단의 개선을 통해 건축수준을 향상하는 것에 초점
- 주택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등에서 다루는 정책대상인 주택공급, 도시기반시설 SOC 등은 과감히 건축정책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
 - 국가계획의 정책대상 : 법, 지침 및 기준, 행정프로세스 개선, 기술개발, 산업육성·지원 등 제도적 측면에 초점
 - 지역계획의 정책대상 : 지역 공간에 대한 현황 및 문제 진단, 실질적으로 공간의 질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사업에 초점

2. 경상남도 제1차 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

□ (추진전략 1) 건축·도시디자인 향상 부문

- 어촌, 경사지 주거경관 등 경관 세부단위 대상 정책은 추진되지 못했으며, 경관기본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보완 필요

□ (추진전략 2) 건축·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부문

- 최근 도입된 총괄·공공건축가를 중심으로 행정조직 개편과 민간 전문인력 활용을 적극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등 설립 필요

□ (추진전략 3) 친환경 건축·도시 구현 부문

- 녹색건축지원센터 부재로 녹색건축도시 구현 미약
-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정책에 부합하여 정부 시범사업과 연계한 사업 발굴 필요

□ (추진전략 4) 지속가능한 건축물

- 그린리모델링 및 건축물 생애관리 관련 사업은 정부 시범사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과업 성과 달성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추진전략 5) 지역성을 살린 건축문화 형성

- 근대건축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후 후속 관리 및 운영체계 필요
- 근대건축문화유산 및 한옥, 우수건축물을 활용한 건축문화프로그램 도입 확대 필요

□ (추진전략 6) 건축문화 창조 기반 구축

- 건축문화제, 건축문화교육 등 다양한 건축문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 필요
- 화재, 범죄예방 등 재난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상기후, 미세먼지 등 재해부문에 대한 정책 기획 필요

Ⅲ 경상남도 건축·도시환경의 여건변화와 미래전망

1. 메가트렌드 변화와 건축정책

건축환경에 영향을 주는 메가트렌드의 핵심요소인 ①인구사회변화, ②기술변화, ③기후환경변화, ④경제변화, ⑤정책규제변화에 대한 대응



□ 인구변화와 사회구조 변화

-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 전국적으로 빈집 증가 및 문제 심각, 지역간 인구 및 경제적 격차 심화로 정책사업 추진방식의 변화 요구
- (1인가구 및 다문화 등 인구구성 변화) 급격한 1인가구 비중 증가, 지속적인 다문화 가구 증가 등 가구인구 구조변화에 맞춘 건축공간 요구
- (여가와삶의 질을 중시하는사회가치 변화)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생활 SOC 투자 확대 등 생활환경 질 향상을 위한 공공공간 확대

□ 저성장시대의 경제 대응

- (세계 경제체제의 변화)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국내 건축산업의 비중 증가, 해외 설계사와의 협업 증대 등 건축산업 지원 정책 중요성 증대

- (산업구조의 양극화) 대형 및 소형 건축사사무소의 양극화, 수도권과 지방의 건축시장 양극화, 건설과 건축산업의 비중 변화 등 건축산업 체계 정비 필요
- (공유경제 활동 성장) 건축임대시장의 지속적인 확대,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다양화, 유희시설의 활용 필요성 등 건축물 공유자원화에 대한 활용정책 중요

□ 4차 산업혁명 기술 상용화

- (스마트기술의 영향력 증대) 스마트 홈 설계의 빠른 진화, AR·VR, 증강현실 기술 적용 확대 등 첨단건축기술을 적용한 건축산업 지원 정책 요구
- (빅데이터와 건축정보 개방 확대) BIM, BEMS 등 건축정보를 활용한 건축물 확대, 건축도면정보 개방 및 건축허브 구축 등 건축정보 활용 정책

□ 환경변화의 글로벌 영향과 대응

- (이상기후 증가 및 적응)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한 건축물 요구 증대, 국제적인 안전도시 증가 등 기후변화에 적응 가능한 건축도시 요구
- (에너지 자원 고갈 대응)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 제로 에너지 빌딩에 대한 건축 요구 등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대응
- (보건·환경의 글로벌 이슈 대응) 미세먼지 저감 설계, 포스트코로나 등 전 세계적인 보건·환경 문제에 대응한 건축물 대책 마련

□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법제·규제

-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정구조 개선) 건설 및 건축산업의 시장구조 변화, 건축분야 신산업 창출을 위한 건축행정체계 개선
- (사업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건축인허가 및 심의제도 개선, 디자인 저작권 보호, 건축사업의 발주제도 개선 등 건축산업 변화에 맞춘 규제 혁신 필요

2. 포스트코로나 및 그린뉴딜에 대한 대응

□ 코로나 19로 인한 건축·도시공간의 변화

- 코로나19 이후 건축·도시 공간의 구조와 성능 개선에 대한 필요성 증대
 - 대다수 일반 건축물·시설물이 감염병에 대응 가능한 건축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상당수의 건축물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 변화에 영향
-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정의되는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건축정책 마련 시급



□ 한국형 그린뉴딜정책 대응

- 2020년 5월,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한 구상을 발표
 - * 그린뉴딜이란,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분야 등에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하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경제·사회적 불평등까지 해소하는 정책

'한국형 뉴딜' 주요 내용	'그린 뉴딜' 부처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수집·개방·활용 인프라 강화 • 5G 인프라 조기구축, 스마트시티 기술 도입 •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 비대면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교육, 모바일 헬스케어 등 비대면 서비스 기반 조성 ▪ SOC 디지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시설물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 그린 리모델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건축물 성능 단열 설비 개선 통한 생활환경 혁신 ▪ 환경부 - 그린 플러스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 위한 녹색산업 육성 • 온실가스 감축 투자 확대 ▪ 산업부 - 산업지능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전반에 AI 및 빅데이터 적용

3. 경상남도 건축·도시 현황과 이슈

□ 인구구조 변화

○ (인구감수와 세대구성의 변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위험 증가 및 세대 인구구조 변화

-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 연구자료: 경남 합천, 남해, 산청, 의령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
- 1인 가구의 비율은 2015년 27.7%(34.8만 가구)에서 2017년 28.7%로 증가(37만 가구)



○ (노인인구 급증)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경제 활동 인구인 25세~44세 인구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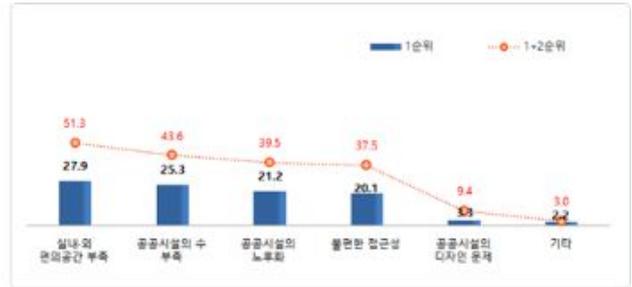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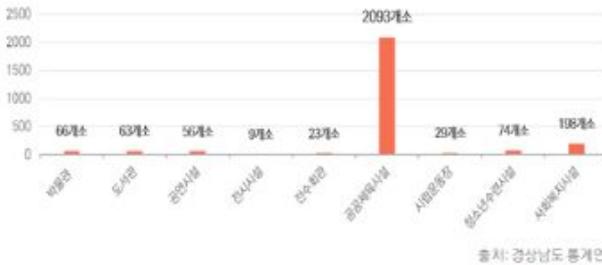
- 거제, 김해, 양산, 창원 등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젊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군 지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0%
-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2010년 33.6%에서 2018년 46.38%까지 증가하였고, 2019년 기준 고령자 비율이 16.3%로 ‘고령사회’에 도달하였으며, 2026년에는 고령자 비율이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



□ 건축 및 정주환경 변화

- (문화 및 복지시설의 부족) 공공시설은 공공체육시설이 2,093개소로 가장 많으며, 문화 및 복지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
 - 특히, 증가하는 고령인구 대비 노인복지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

경상남도 공공시설 현황(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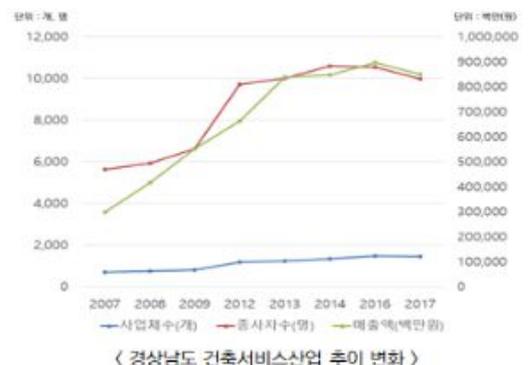
〈 거주지역 공공시설의 문제점 〉

- (노후 건축물 및 빈집 증가) 경상남도는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빈집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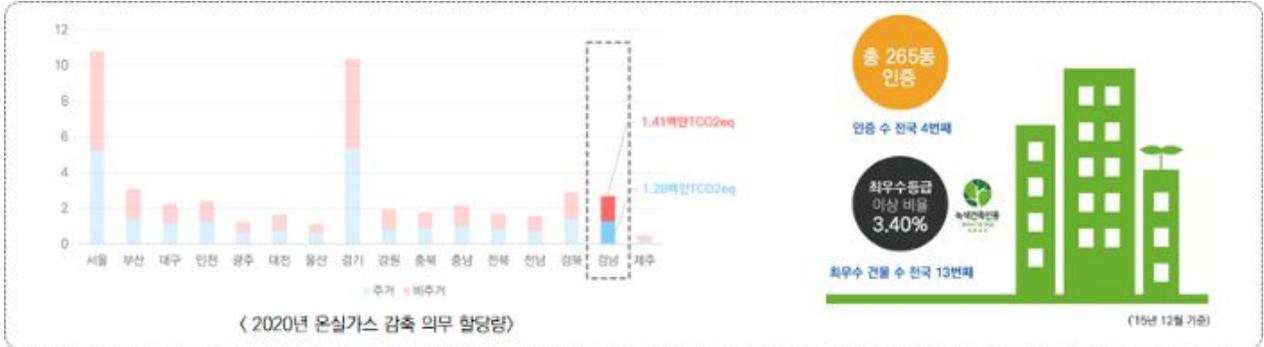


□ 건축산업 및 녹색건축 현황

- (소규모 건축산업 구조) 전국 8개 도 지역 중 경기도를 제외한 규모면에서 가장 성장하였으나 주로 1~4인의 소규모 건축산업이 대부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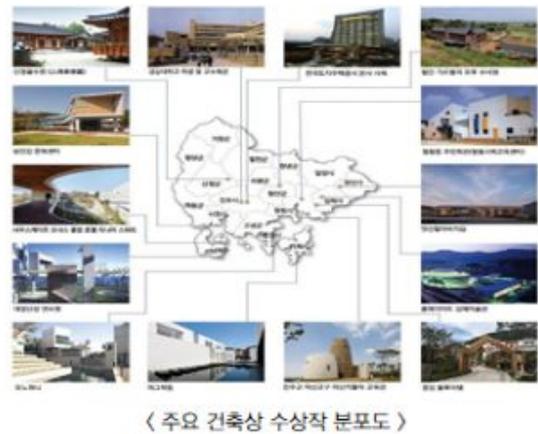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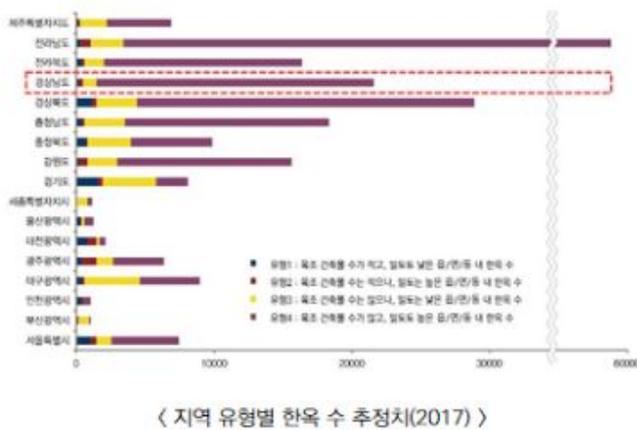


- (우수한 녹색건축물 부족) 총 265동의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았으며, 전국에서 4번째로 인증 건물이 많은 지자체이지만, 최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건물 비율이 3.40%로 전국 13번째



□ 건축자산 및 경관자원

- (우수한 건축자산 보유) 총 1,885개의 문화재 보유(전국 2위)하고 있으며, 이 중 건축·도시 관련 역사자원은 402개가 존재
 - 추정 한옥 수는 21,545채(전국 3위, 10.2% 추정), 각 지역 산재한 근대 주요 건축문화유산 326곳 실태 조사(2015년)
 - 현대 건축물은 전체 38개의 건축상 수상작(2018년)을 보유, 격년으로 ‘경상남도 건축대상제’ 개최



- (건축물과 연계 가능한 풍부한 관광자원) 진주성, 해인사 등 역사적 건축유산, 화개장터, 차 박물관, 남사예담촌 등 전통문화 체험 문화자원 풍부
 - 기존의 우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경상남도의 지역 특색이 담긴 관광코스 개발 및 구체적 홍보 계획 필요



바람의 언덕



다랭이마을



진주성



해인사



화개장터



매암 차문화 박물관

○ (도서 및 해안선, 풍부한 자연경관) 865개의 도서, 2,390km의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남 내륙권의 잠재 및 우수한 인문·자연 경관자원

■ 경상남도 내륙권 주요 경관자원 예시



거창 남령



함양 옥심령



함양 자간재



양산 오봉산 임경대(낙동강)



하동 섬진강 하동모교



창녕 낙동강 유채꽃밭

○ (아파트, 산업단지 등 도시경관)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건축물 관리 필요

■ 통영시의 경관조성 예시



경사도로



아파트 벽화



오렌지색 지붕 색채

■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 사례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



숙박시설

4. 경상남도 도민 및 전문가 인식

도민

- 조사 대상** • 만 19세 이상 경상남도 거주 도민 778명
- 조사 설계**
 - 조사기간 : 2019년 9월 2일 ~ 9월 20일
 -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및 현장 대면조사 *일부 지역
- 조사 목적** • 경상남도 18개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건축 및 도시환경에 대한 전반적 인식조사를 통해 건축 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
- 조사 내용** • 총 4개 주제, 12개의 세부질문사항으로 구성(정주여건 및 생활권 관련 인식, 지역 공공시설 관련 인식, 사회 이슈 관련 인식, 지역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인식)

전문가

- 조사 대상** • 경상남도 건축정책담당자, 지역 전문가 83명
- 조사 설계**
 - 조사기간 : 2019년 8월 27일 ~ 9월 27일
 -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 조사 목적** •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도시 비전 수립 및 정책방향 설정에 활용
- 조사 내용** • 총 2개 주제, 7개의 세부질문사항으로 구성(경상남도 건축 현안 인식, 제2차 건축기본계획 추진 방향성)

□ 정주여건 및 생활권 관련 인식

- 정주환경에 대해서는 55.9%가 만족, 15.3%가 불만족이며, 도시 거주민이 농촌, 어촌 거주민 대비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음
 - 도민 대부분이 '부족한 편의시설'(68.9%)을 가장 큰 거주지 주변환경 불만족 이유
 - 동부 중추도시생활권은 '주차공간 부족 및 불법주차'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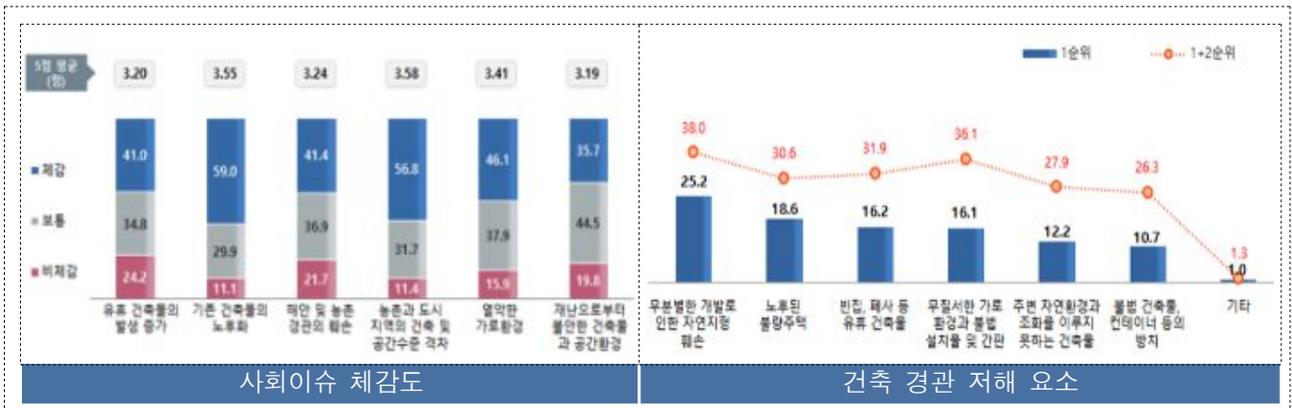
- 지역 공공시설에 대한 디자인 만족도는 '노인복지시설'이 가장 낮음
 - 공공도서관(3.37점) > 공원 및 놀이터(3.35점) > 공공체육시설(3.33점) > 교육시설(3.26점) > 공공의료시설(3.25점) > 공공청사(3.23점) > 문화시설(3.22점) > 노인복지시설(3.12점) 순

- 공공시설 문제점으로 ‘실내·외 편의공간 부족’, ‘공공시설 수 부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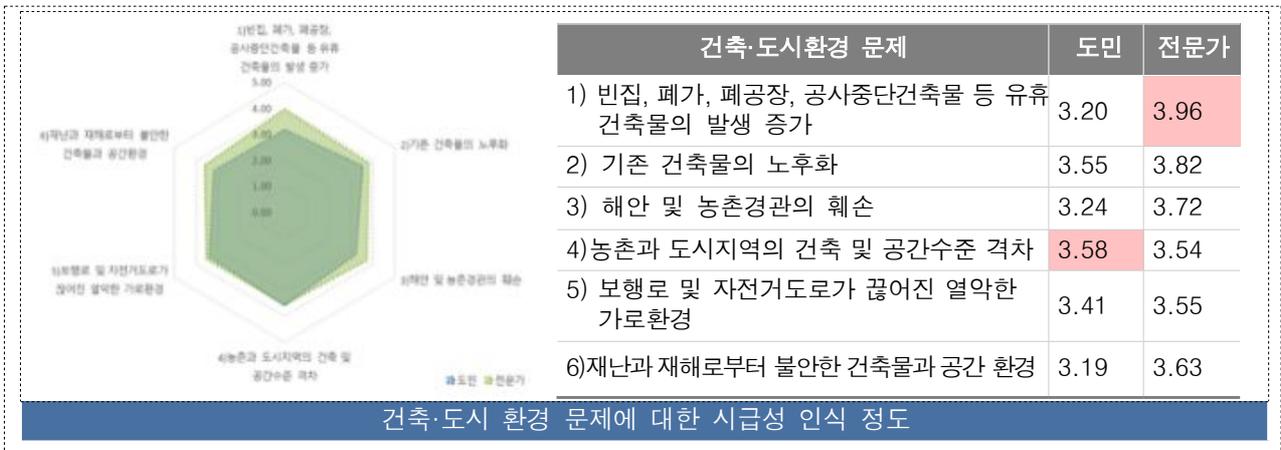


□ 건축·도시관련 문제점에 대한 인식

- 경상남도 관련 사회 이슈로는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59.0%)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
 -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59.0%) > ‘농촌과 도시지역의 건축 및 공간수준 격차’(56.8%) > ‘열악한 가로환경’(46.1%) > ‘해안 및 농촌경관의 훼손’(41.4%) > ‘유휴 건축물의 발행 증가’(41.0%) > ‘재난으로부터의 불안한 건축물과 공간환경’(35.7%)
 - 동북부 농어촌생활권은 ‘유휴 건축물의 발행 증가’(3.83점), 도농연계생활권은 ‘해안 및 농촌경관의 훼손’(3.84점), ‘열악한 가로환경’(3.87점) 문제 인식
- 지역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지형 훼손’(25.2%)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
 - 그 외에도 ‘노후된 불량주택’, ‘빈집, 폐사 등 유휴건축물’, ‘무질서한 가로환경과 불법설치물 및 간판’ 등을 문제점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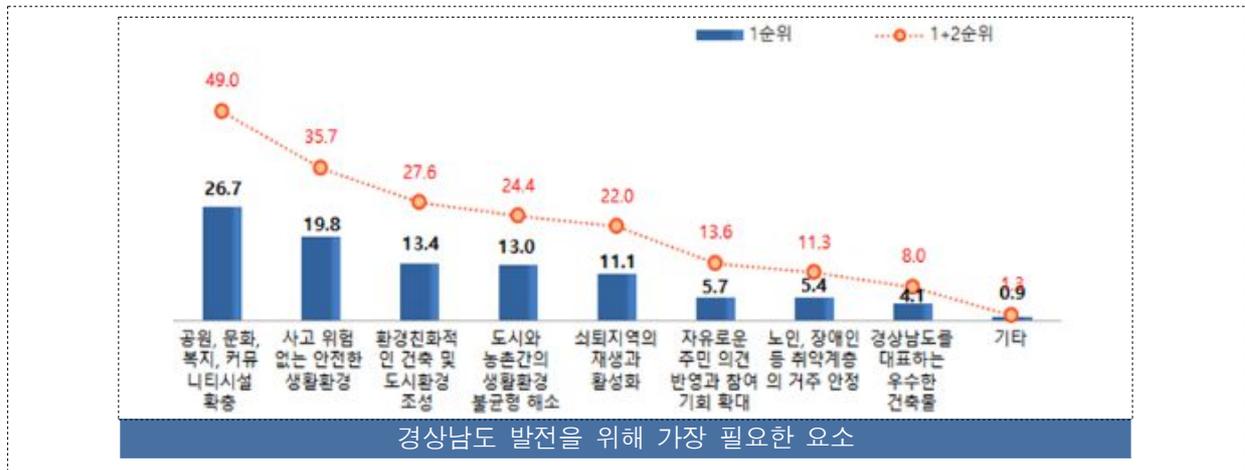


- 도시 환경 문제로는 ‘농촌과 도시지역의 건축 및 공간수준 격차’(도민)와 ‘빈집, 폐가, 폐공장, 공사중단 건축물 등 유휴 건축물 발생 증가’(전문가)를 시급한 문제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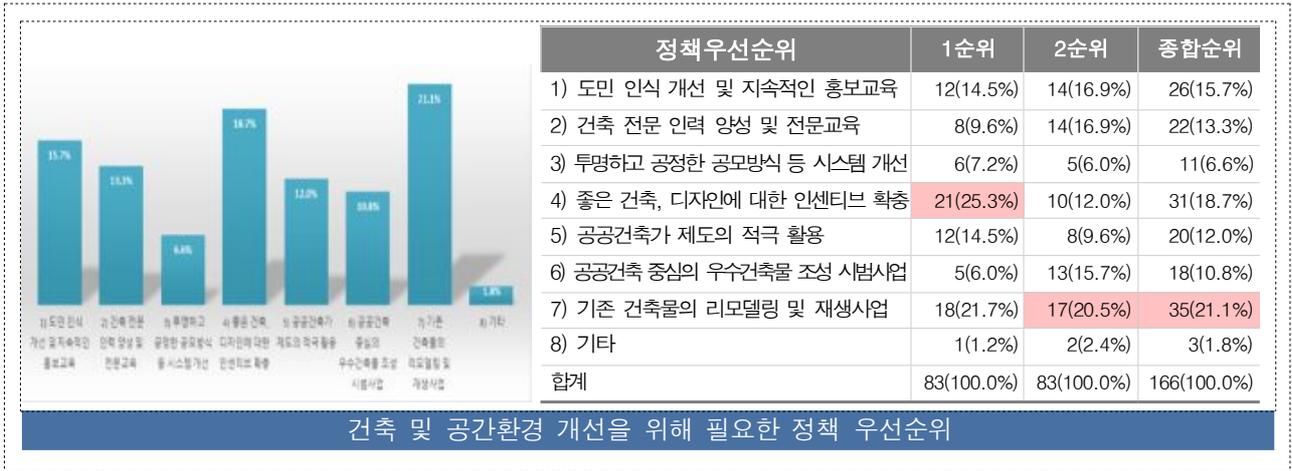


□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 경상남도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에 대해 도민들은 ‘공원, 문화, 복지, 커뮤니티시설 확충’(26.7%)을 가장 많이 응답함
 - 공원, 문화, 복지, 커뮤니티시설 확충’(26.7%) > ‘사고 위험없는 안전한 생활 환경’(19.8%) > ‘환경친화적인 건축 및 도시환경 조성’(13.4%) 등 순



- 전문가그룹은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및 재생사업’(21.1%)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으로 인식
 - ‘좋은 건축, 디자인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18.7%), ‘도민 인식 개선 및 지속적인 홍보교육’(15.7%), ‘건축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교육’(13.3%), ‘공공건축가제도의 적극 활용’(12.0%) 순



□ 정책만족도와 중요도

- 14개의 건축정책 이슈와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각 정책과제별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전체 통산 2.73점으로 보통(3점)보다 낮은 결과치
- 반면, 각 과제별 정책적 중요도에 있어서는 전체 통산 3.86점으로 높게 나타나 해당 정책과제들의 시행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정책이슈별 중요도와 만족도 간에 인식차가 큰 정책과제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건축정책’, ‘노후 건축물의 정비 및 안전 대책’, ‘해안선, 산맥, 도서지역 등 지역 환경과 어울리는 건축디자인 관리’ 등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중점 과제 발굴 필요

[경상남도 건축정책 이슈별 만족도-중요도]

건축정책 이슈	만족도	중요도	격차
01)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건축정책	2.46	3.90	1.44
02) 노후 건축물의 정비 및 안전 대책	2.69	4.10	1.41
03) 지역 산업단지 및 노후공장에 대한 경관 개선	2.51	3.77	1.26
04) 빈집정비 및 활용 정책	2.82	3.89	1.07
05) 지역주민의 생활인프라 개선	3.05	3.84	0.79
06) 소규모 건축산업의 전략적 지원·육성	2.54	3.77	1.23
07) 제로에너지건물 및 그린리모델링 확대	2.67	3.71	1.04
08) 우수 건축자산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2.66	3.84	1.18
09) 지역특색이 담긴 관광 프로그램 개발	2.83	3.67	0.84
10) 해안선, 산맥, 도서지역 등 지역 환경과 어울리는 건축디자인 관리	2.57	3.87	1.30
11) 생활 SOC개선 및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	2.83	3.83	1.00
12) 화재, 범죄예방, 폭염, 미세먼지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3.00	3.92	0.92
13) 내실 있고 효율적인 건축행정체계 마련	2.96	4.06	1.10
14) 지역 및 공공건축가 지원 및 지원기구(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2.61	3.84	1.23
평균	2.73	3.86	1.13

5. 권역별 현황과 이슈

시군 워크숍 및 권역별 분임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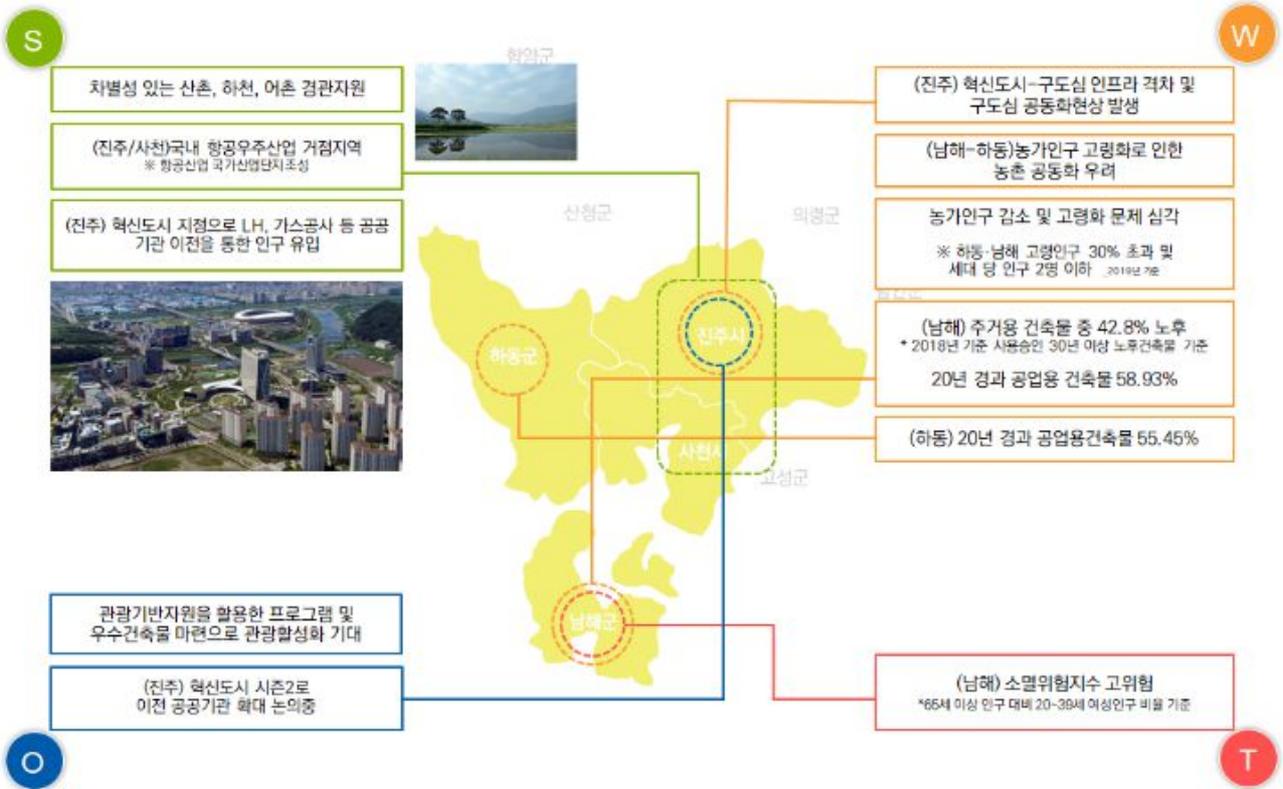
- 일시/장소**
 - 2020년 2월 6-7일(1박 2일), 사천 KB 인재니움(사천시 곤양면 소재)
- 참석자**
 - 경남도청 국장·과장·실무진, 시·군 담당과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진
- 권역별 분임토론**
 - 시군별 건축 관련 정책 추진상황, 건축관련 주요 사업 제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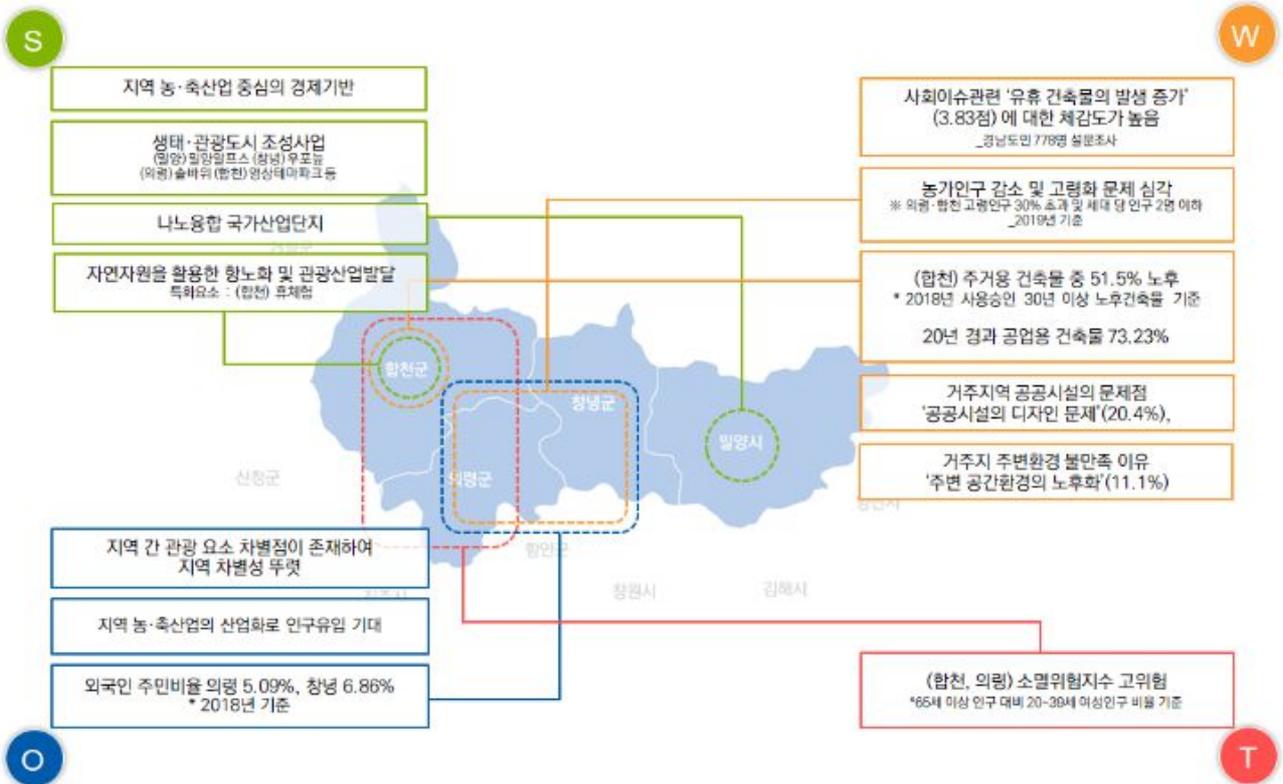
□ 동부중추도시 생활권(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함안군)



□ 서부중추도시 생활권(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 동북부 농어촌 생활권(밀양시, 창녕군, 의령군, 함천군)



□ 서북부 농어촌 생활권(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 도농 연계생활권(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6. 경상남도의 현황과 정책방향

□ 천혜의 자연자원인 해안선, 산맥, 도서지역 등 지역환경과 어울리는 건축디자인 관리

○ 경상남도의 해안선 길이는 2,390km, 도서수는 865개로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바다와 접하는 7개 시군지역의 해안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과 어울리는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 특히 여가문화 확산, 주 52시간 시행 등으로 해양관광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 해안선 및 도서, 산 등 경상남도 자연 경관자원을 발굴하고, 경관관리 계획 수립 필요
- ☞ 도시, 농촌, 어촌환경 및 경관을 훼손하는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 마련 필요
- ☞ 신도시와 구도심, 도시 및 비도시, 농어촌 및 산간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재생을 위한 건축도시 관련 사업 제안

□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SOC 개선 및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

○ 공공건축은 도민 생활 및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로써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매력적인 공공건축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

○ 특색없는 디자인 및 지역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건축물이 다수 건립되어 이에 대한 전문화된 디자인 관리체계 필요

○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공건축가 지정 의무화, 소규모 생활SOC 디자인 설계 절차 개선, 설계공모 대상 확대 등 공공건축 관련 정책 반영

- ☞ 노후 공공건축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조사 및 시설관리 방안 마련 필요
- ☞ 시군 지역별 인구구조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수요자 관점에서의 다양한 생활 SOC 시설 개선
- ☞ 총괄계획가를 중심으로 공공건축 전반에 대한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역 내 공공건축 기획단계를 보강할 수 있는 전담기구 필요

□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빈집정비, 고령친화형 디자인 도입

-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비해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하고, 시·군별 불균형적으로 분포
 - 특히, 비도시의 농가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어 고령자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노후 농가주택에 대한 개선 지원 필요
- 노후건축물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선 시급
 - 경상남도는 타 지역에 비해 3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 많아 전국 평균 비율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특히 주거용, 단독주택의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

- ☞ 고령화에 대응하여 지역별 노인복지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노인 밀집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추진
- ☞ 지역 내 빈집을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 제시
-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개선 및 그린리모델링 등의 건축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

□ 화재, 범죄예방,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미세먼지 등 안전한 건축·도시환경 조성

- 최근 폭염, 가뭄, 폭우·폭설 등 이상기상 현상이 잦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문제 대두
 -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축계획 과정에서 각종 재해·재난관련 과학적 분석 결과를 건축설계에 반영해 안전성능을 향상시킬 필요

-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화재 및 범죄예방에 대한 다양한 정책 확대 필요
- ☞ 건축물 계획단계부터 에너지효율과 재난재해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건축물 조성방안 마련
- ☞ 폭염 및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바람길 조성, 교통체계, 단지배치 등 도시의 거시적 측면과 폭염·미세먼지 집중관리 건물 및 장소 지정, 저감시설 설치 등 미시적 측면의 대책 마련

□ 내실있고 효율적인 건축행정체제 개편으로 지역 건축산업 발전 유도

-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증가로 건축행정에 대한 수요 급증하는 등 행정서비스 효율성 확보 필요
 -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축심의 효율화를 위해 사전검토 및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심의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지자체 자체 운영제도를 시행 중
 - * 서울시는 건축허가 전과정에 공무원이 밀착 지원해 허가기간을 단축하는 '건축허가 신속행정 서비스' 제도를 시행 중
 - * 진주시와 함양군에서는 지자체 조례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심의절차 및 방법을 간화하여 운영 중
- 건축인허가 및 민원 등의 실무업무로 건축관련 부서 업무가 과중하고, 최근 새로운 건축정책 도입에 따른 업무부담에 대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

☞ 건축분야 신기술 및 정책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기초지자체의 현행 건축관련 조직체계 및 인력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새롭게 정비할 필요

☞ 건축행정 업무의 간소화 및 효율화 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건축정책에 대한 공무원 교육 확대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지역전문가 육성

- 건축서비스산업은 타 산업의 중간재로써 전후방 산업연계효과가 크고,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잠재력이 높은 지식 및 기술 집약적인 산업
- 그러나 건축산업의 비정상적인 시장구조, 새로운 수요변화 및 기술발전에 대응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진흥책을 마련할 필요
 - 대부분 건축관련 법제도가 중·대규모 건설시장에 맞추어져 있어 소규모 건축물 조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산업 진흥정책 고려 필요

☞ 지역 공공건축사업 기획관리역량 강화, 지역 건축 코디네이터 확대, 건축계약 선진화 및 표준화, 건축서비스 혁신기업 지원사업, 청년창업 지원 등 경상남도 지역의 건축서비스산업 구조에 적합한 정책 마련

□ 풍부한 자연에너지를 활용하고, 자연과 어울리는 녹색건축디자인 적용·확대

○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건축물 다수 분포

- 총 312동의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인증(2019.1월 기준)을 받았으며, 전국에서 4번째로 인증 건물이 많은 지자체이지만, 최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건물 비율이 2.22%로 전국 14번째

○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하고, 신재생 에너지와 결합한 형태의 차별적인 녹색건축 사업 요구 증대

- ☞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자연경관 및 디자인을 저해하는 요소를 최소화한 녹색건축 조성
- ☞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확대, 노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녹색건축 산업 고도화 등 녹색건축정책 발굴·기획

□ 지역 건축자산의 보존 및 도시재생 활성화 자원으로 활용

- 경상남도는 경북에 이어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문화재가 많은 지자체로써 문화재, 한옥 등 전통건축양식, 근대건축유산 등 건축문화자산이 풍부한 지역
- 건축문화자산의 보존과 함께 지역특성을 건축적으로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 발굴 필요

- ☞ 문화재 한옥 및 근대건축물, 건축상을 수여받은 건축물, 현상공모 당선 건축물 등 우수 건축자산 현황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 필요
- ☞ 기존의 우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경상남도의 지역 특색이 담긴 관광코스 개발 및 구체적 홍보 계획 필요

IV 비전 및 목표 설정

1. 계획방향 및 과제도출 과정

□ 계획 수립 원칙

-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원칙은 ‘포용성’, ‘다양성’, ‘지역성’, ‘지속성과 창의성’, ‘실천 가능성’ 등 5개 기본원칙 설정
-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포용과 결합, 다수가 참여하는 민주적 계획, 경상남도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계획, 지속가능한 가치를 추구하고 창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담는 계획, 지역 전략계획으로서 정책적 수용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 수립

1

포용적 정책으로서의 건축기본계획

- 신규 건축관련 법령 및 계획간의 관계를 고려한 계획 수립
-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고려한 건축정책

2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계획

- 전문가뿐만 아니라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참여형 계획 수립
- 18개 시·군과의 정보공유 및 지역색과 다양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

3

실행력이 담보된 실천 가능한 계획

- 실무자가 계획 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건축정책 지원기구 연계방안 제시
- 지역의 예산과 경제력을 고려한 실천가능한 계획

4

창의성과 지속성이 조화된 계획

- 새로운 사회이슈와 국가정책에 대응하는 과제 및 실행방안 제시
- 연속계획으로서 제1차 계획과의 연속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계획 수립

5

지역어건 및 특성을 고려한 계획

-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에 입각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
- 지역계획으로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사업 발굴에 차별화

[계획수립 5대 원칙]

□ 비전 목표 및 전략과 세부단위과제 도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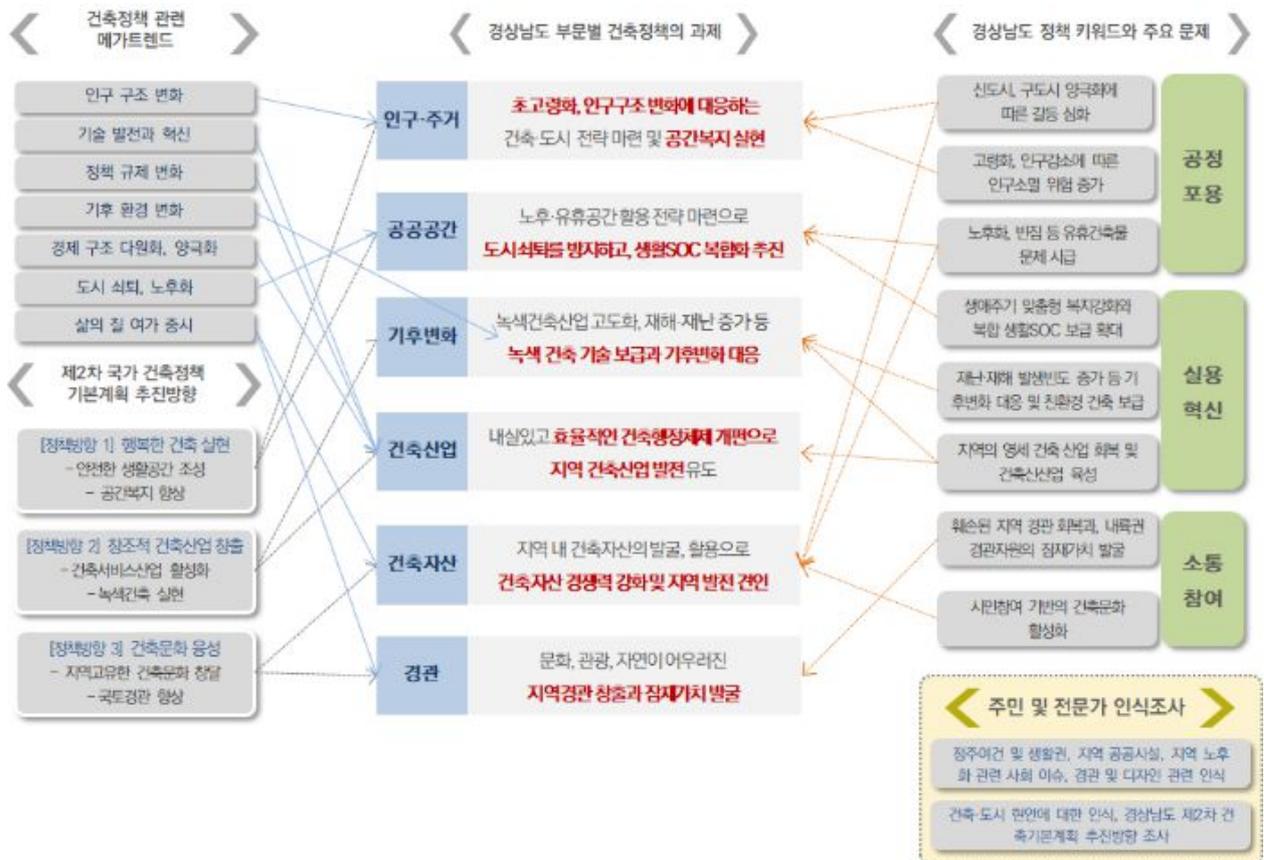
- 지역현안, 주민 및 전문가 정책수요, 경상남도 제1차 건축기본계획의 보완점 및 성과, 정부추진과제와의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과제 도출의 근거 마련
 - 통계, 공공데이터, 18개 시·군 주민 및 실무자 인식조사를 통한 정책수요 반영
 - 지역의 기초현황과 도민 및 실무자의 수요를 반영한 기본방향 구상
- 경상남도 여건과 비전에 부합하는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재정립
 -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도정비전을 토대로 도에서 수립·운영 중인 상위 계획과 관련계획을 고려한 건축정책 비전과 목표 설정
 - 내부적 여건과 외부적 여건을 고려한 기본목표 수립 및 추진방향 재정립
 - 변화된 건축·도시 패러다임 분석 등 미래 건축정책 방향 제시
 - 과제도출을 위한 전문가TF 운영 및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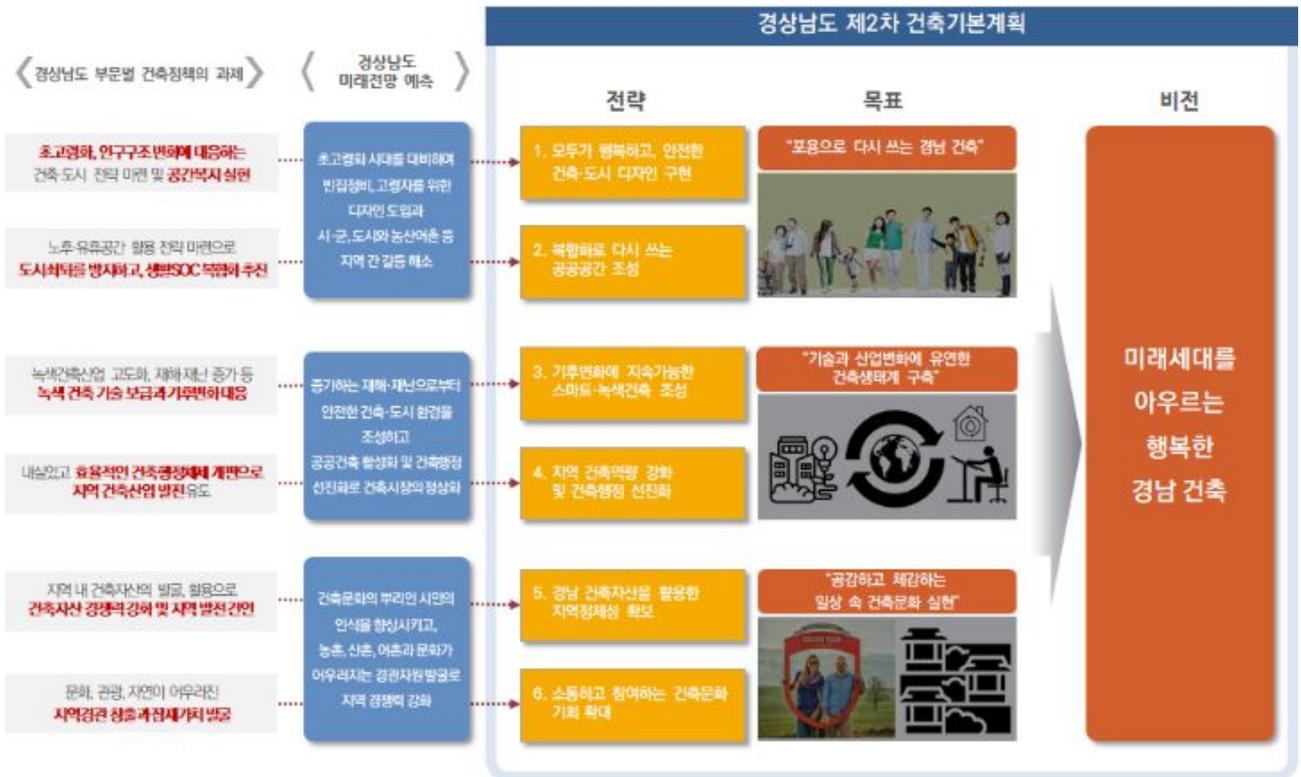
[계획 수립을 위한 비전 및 과제 도출 과정]

○ 경상남도 도정비전,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건축정책 관련 메가트렌드를 토대로 6개 주제에 대한 건축정책 및 방향성 제안

- (인구 및 주거) 초고령화,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건축·도시 전략을 마련하고, 공간 복지 구현을 통한 포용적 건축정책 제안
- (공공공간) 도시 쇠퇴, 노후화, 빈집 등에 대응 가능한 노후·유휴공간 활용 전략을 마련하고, 보편적 복지 구현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 추진
- (기후변화) 폭염, 폭우 등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대응하고 녹색건축 기술을 보급·확산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구현
- (건축산업) 지역 건축 인력의 활용 및 활동 여건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건축행정 체제 개편으로 지역 건축산업 발전 유도
- (건축자산) 지역의 잠재 건축자산을 발굴하고 활용 가치를 높임으로써 지역의 건축문화 경쟁력과 지역 활성화 견인
- (경관) 훼손된 경관은 회복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관광, 자연이 어우러진 경관자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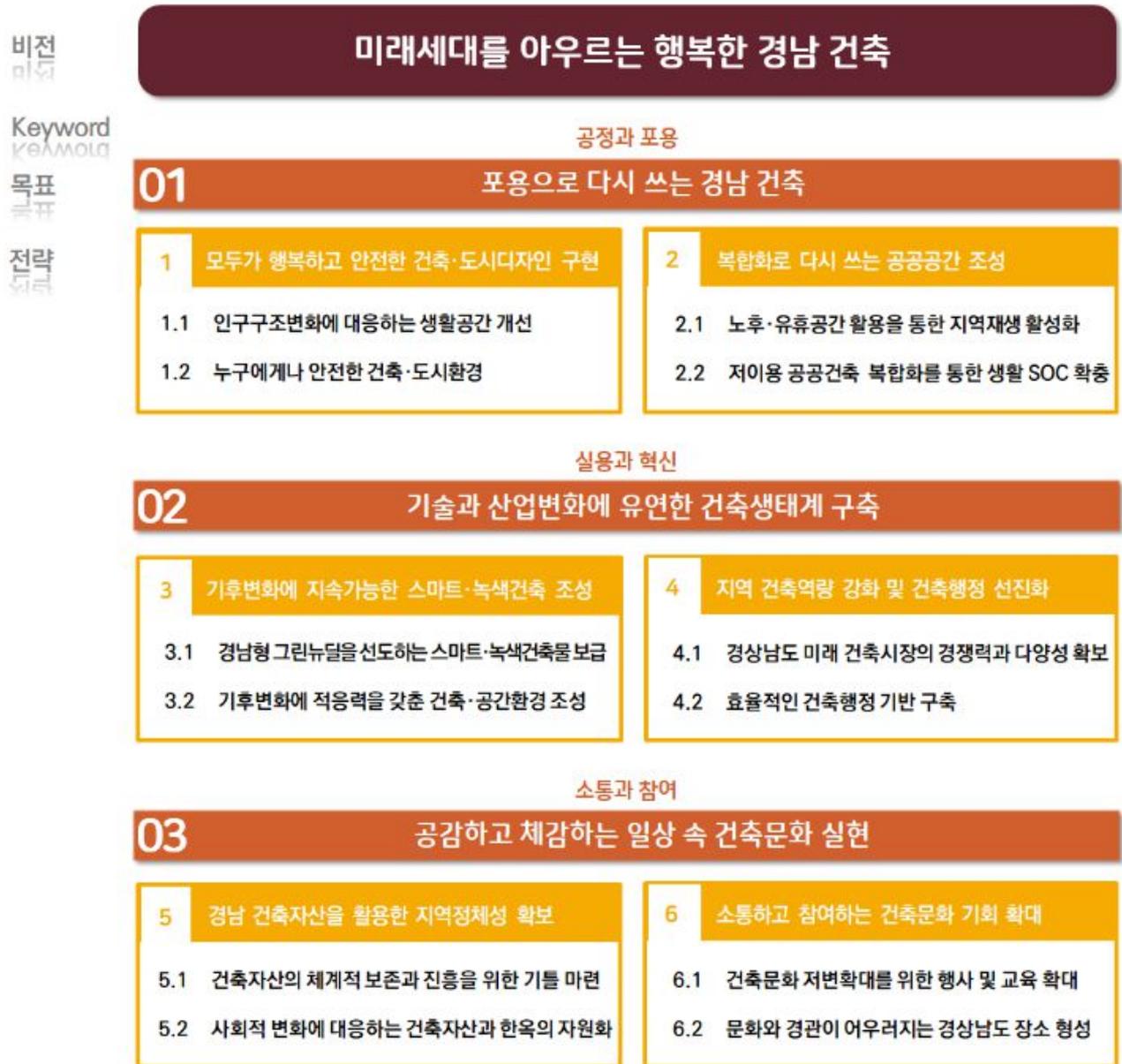


○ 6개 주제별 건축정책 방향과 경상남도 미래전망을 고려한 전략, 목표 및 비전 도출



2.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 비전 및 주요내용

- 제2차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은 도정비전과 지역의 여건변화, 계획수립을 위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행복한 경남 건축」 을 비전으로 설정
- 「포용으로 다시 쓰는 경남 건축」, 「기술과 산업변화에 유연한 건축생태계 구축」, 「공감하고 체감하는 일상 속 건축문화 실현」 을 3대 목표로 선정하고, 6개 전략 및 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 단위과제 도출



[그림 4-48]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3. 정책목표별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1. 목표 1. 포용으로 다시 쓰는 경남건축

“공정과 포용” 포용으로 다시 쓰는 경남건축			
전략	실천과제	주요내용	단위과제
1.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건축·도시 디자인구현	1.1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생활공간개선	1.1.1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는 노인복지 향상 정책 마련	▶지역별 노인복지시설 분포현황 파악 및 전수조사 ▶ 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 수립 ▶ 경상남도형 스마트홈 보급
		1.1.2 취약계층 주거 지원 및 문화 사각지대 해소	▶대학생·청년 등 1인 가구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 추진 ▶ 산업단지 근로자 맞춤형 주거지원 ▶ 청년친화 문화공간 ‘청년센터’ 조성 확대 ▶ 외국인 대상 문화·복지공간 조성 확대
	1.2 누구에게나 안전한 건축·도시환경	1.2.1 건축안전기반구축을 통한 재난안전 대비	▶ 노후공공건축물 분포지역 현황 및 실태조사 ▶ 민간 소유 건축물 안전점검 컨설팅 및 비용지원 ▶ 경남 동부권 안전교육 체험시설 확충
		1.2.2 디자인으로 만들어가는 안전한 건축·공간환경	▶ 경상남도 BF 인증제 도입 ▶ 무장애 공공공간 시범사업 추진 ▶ 경상남도 범죄취약지역 개선방안 연구 ▶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2. 복합화로 다시 쓰는 공공공간 조성	2.1 노후·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활성화	2.1.1 빈집 정책 실행체계 구축	▶ 빈집 특례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개정 ▶ 빈집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경상남도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 시·군 빈집실태조사 추진 ▶ 시·군 빈집정비계획 수립
		2.1.2 빈집활용 기반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 경상남도 빈집뱅크 신설 및 운영방안 마련연구 ▶ 농어촌 빈집 리모델링 숙박시설 지원사업 ▶ 도민 빈집 실험학교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2.1.3 유휴공간 활용 시범사업 및 프로젝트 추진	▶ 빈집 철거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확충 ▶ 마을과 지역대학생이 함께 하는 자투리땅 살리기 프로젝트
	2.2 저이용 공공건축 복합화를 통한 생활SOC확충	2.2.1 거점공공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SOC 복합화	▶ 「경상남도 생활SOC 확충계획」 수립을 통한 생활SOC 확충 본격화 ▶ 생활SOC 복합화 시범사업 추진 ▶ 저이용 공공건축물 유휴공간을 활용한 복지·편의 공간 확보
		2.2.2 전통시장 연계 지역문화 거점 공간 확충	▶ 전통시장 매개의 지역문화 거점 연계 활용계획 수립 ▶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원도심 도시재생 시범사업
		2.2.3 다양한 발주방식 도입을 통한 우수디자인 창출	▶ 지역건축사 대상 노후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제안공모 ▶ 소규모 공공건축물 간이설계공모

② 목표 2. 기술과 산업변화에 유연한 건축생태계 구축

“실용과 혁신” 기술과 산업변화에 유연한 건축생태계 구축			
전략	실천과제	주요내용	단위과제
3. 기후변화에 지속가능한 스마트·녹색건축조성	3.1 경남형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스마트·녹색 건축물 보급	3.1.1 경남형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선도 강화 ▶ 소규모 노후주택 에너지성능 지원계획 수립 ▶ 지역 커뮤니티시설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3.1.2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 잠재 발전량 및 설치지역 파악 ▶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결합형 녹색건축물 보급
		3.1.3 제로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시범사업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대응체계 구축 ▶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추진
	3.2 기후변화에 적응력을 갖춘 건축·공간환경 조성	3.2.1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상남도농산어촌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재난 대피시설 취약지역 파악 ▶ 지역 커뮤니티 시설 안전성능 진단 ▶ 무더위 쉼터 기능 확대를 통한 우리동네 방재쉼터 조성
		3.2.2 폭염, 홍수 등 하절기 이상 기후 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절기 이상기후 유형별 취약 건축물 파악 ▶ 지역맞춤형 옥상녹화 및 쿨루프 사업 추진 ▶ 건축물 차양설치 및 우수활용 권장
	4. 지역건축역량 강화 및 건축행정 선진화	4.1 경상남도 미래 건축시장의 경쟁력과 다양성 확보	4.1.1 건전한 건축설계시장 환경 구축을 위한 건축사사무소 실태조사 실시
4.1.2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대학교와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지정 ▶ 건축시장 창업지원 프로그램 시범 운영
4.1.3 지역건축가 및 우수건축 업체홍보와 업무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사사무소의 업무범위 제도 개선 ▶ 지역 우수건축가 활용계획 수립 ▶ 우수건축 설계·시공 업체 정보제공 플랫폼 개발
4.2 효율적인 건축행정기반 구축		4.2.1 경상남도건축지원센터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 건축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 경상남도 건축지원센터 운영방안 마련 ▶ 경상남도 건축지원센터 설립근거 조례 제정
		4.2.2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 및 공공건축가제도 세부운영계획 수립 ▶ 총괄 및 공공건축가제도 활용 매뉴얼 배포 ▶ 시·군 건축직 공무원 워크숍 정기 개최 ▶ 경상남도 공공건축 포럼 추진

③ 목표 3. 공감하고 체감하는 일상 속 건축문화 실현

“소통과 참여” 공감하고 체감하는 일상 속 건축문화 실현			
전략	실천과제	주요내용	단위과제
5. 경남 건축자산을 활용한 지역정체성확보	5.1. 건축자산의 체계적 보존과 진흥을 위한 기틀마련	5.1.1. 건축문화 아카이브 관리·운영 고도화	▶기 구축한 근대건축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계획 및 활용방안 수립 ▶ 건축문화자산 유형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건축문화 관련 홍보 플랫폼의 일원화 ▶ 도민과 함께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마련
		5.1.2.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건축자산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종합관리계획 수립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5.2.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자산과 한옥의자원화	5.2.1. 건축자산의 관광·문화 상품화를 통한 활용 확대	▶ 도시재생·SOC 사업과 연계한 건축자산 자원화 구상 ▶민간소유 건축자산 보존을 위한 민간소유주 지원 방안 마련 ▶ 건축문화자산의 관광 활성화
		5.2.2. 한옥 및 목조건축의 현대적 활용을 통한 한옥·목조건축문화 확산	▶ 한옥 및 건축자산 전수조사 시행 ▶ 도내 한옥 및 목조 공공건축물 건립 ▶ 기존 한옥매입을 통한 공공한옥 활용 ▶한옥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한옥체험업 인센티브 제도 구축
6. 소통하고 참여하는 건축문화기회 확대	6.1. 건축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행사 및 교육확대	6.1.1. 건축문화 행사·축제 및 건축도시 관련 사업의 주민 참여 활성화	▶ 경남건축문화제 기획 및 운영 안정화 방안 마련 ▶ 경남건축문화제 콘텐츠 다양화 및 도민 참여 확대 ▶지역 사업과 연계한 찾아가는 경관교육 시범사업
		6.1.2. 연령대별 건축문화 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확산	▶ 초·중·고등학생·시니어 대상 건축문화 교육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 기초교육 과정과 연계한 건축문화 교육 협정 ▶ 민간건축주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6.2. 문화와 경관이 어우러지는 경상남도 장소 형성	6.2.1.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경관사업 시행 및 체감도 증진	▶ 눈이 편안한 도시만들기 사업(가칭) ▶ 경관 개선을 위한 도민참여 시스템 마련 ▶ 시민 중심의 경관사업 모니터링으로 지역 경관 개선
		6.2.2. 지역경관자원의 가치 발굴 및 연계협력 사업 추진	▶ 경상남도 경관도로 발굴 및 선정 ▶ 경관도로 브랜딩 공모전 개최 ▶ 경관도로 주변지역 경관조성 및 경쟁력 강화 ▶경관도로 주변 마을 특성화 사업 및 연계·협력 벨트 구성
		6.2.3. 우수한 자연환경에 순응하는산업경관 형성	▶ 산업단지 위해경관 파악 및 경관개선 시범사업 시행 ▶지역 경관을 고려한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기준 설정 ▶지역 경관에 순응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경관관리

전략1.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건축·도시 디자인 구현

◆ 인구구조변화 및 다양한 인구특성 발생에 대응하는 건축·도시정책 마련을 통해 경남도민 공간복지 향상

배경 및 목적

-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건축도시적 대응 필요) 고령인구 및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건축정책 제언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정책 필요) 청년, 1인가구, 신혼부부, 외국인 등 도내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주거 및 문화·복지정책 마련
- (누구에게나 안전한 건축도시환경 조성) 노후건축물 증가 및 건축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장애인·어린이·여성 등 누구에게나 안전한 건축 및 도시환경 조성



증가하는 고령인구에 대응하는 건축·도시적 여건을 마련하고, 청년, 신혼부부, 1인가구, 외국인 등을 포용하기 위한 정책 마련

1.1.2 취약계층 주거 지원 및 문화 사각지대 해소

- ① (대학생·청년 등 1인 가구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업을 통한 미분양주택 및 도심 빈집 매입으로 1인 가구 셰어하우스 시범사업 추진

※ 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사회적 주택 사업



[LH 사회적 주택 입주자모집]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청년 사회적 주택 모집 현황]
출처 : 민달팽이협동조합 홈페이지

- ② (산업단지 근로자 맞춤형 주거지원)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선정되면서 산단 내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마련

* 2019년 8월, 경상남도 - LH - 국가산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업무협약

- ③ (청년친화 문화공간 '청년센터' 조성 확대) 도내 공공기관 및 대학, 또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유휴건축물을 활용한 청년친화 문화공간 조성 확대

* 2020년 기준 경상남도 내 '청년센터'는 창원, 통영, 거제, 남해 4개소

- ④ (외국인 대상 문화·복지공간 조성 확대) 도내 이주 외국인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문화·복지공간 조성 및 내국인 융화 프로그램 운영

* 현재 도내 위치 외국인 복지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거점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3곳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8곳으로 확인되며, 도심지역에 밀집하여 위치하고 있음

1.2. 누구에게나 안전한 건축·도시환경

1.2.1. 건축안전기반 구축을 통한 재난안전 대비

① (노후공공건축물 분포지역 현황 및 실태조사) 사용연수 30년 경과 공공 건축물 실태조사 실시 및 리모델링·내진보강 지원사업 시범추진

- * 기존에 운영 중인 경상남도 건축사회의 '건축사 재난안전 지원단' 민간인력을 활용하여 노후공공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
- * 실태조사 항목 : 『건축물관리법』 제6조(실태조사)에 의거, ①건축물 용도별·규모별 현황, ②건축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능력 적용현황, ③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및 보강 현황, ④ 건축물의 유지관리



출처 : 경상남도건축사회

※ 건축사 재난안전 지원단

-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전문가로서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축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사 재난안전 지원단을 출범
-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은 협회에 '중앙 재난안전지원단'과 17개 시도건축사협회에 각 '건축사회 재난안전지원단'으로 구성
- 평상시에는 건축분야 사회봉사 활동 조직으로 운영하고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건축재난 구호·구조활동 조직으로 운영

② (민간 소유 건축물 안전점검 컨설팅 및 비용지원) 민간 소유 건축물 안전 점검 컨설팅 지원 및 다중이용시설 우선 내진보강 비용 지원

민간 소유주	시·군담당부서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민간 소유주	시·군담당부서
안전점검 의뢰	의뢰 접수 및 건축사수당지급	안전점검 실시 및 컨설팅	내진보강 비용신청	내진보강 비용지원

[민간 소유 건축물 안전점검 컨설팅 및 비용지원]

③ (경남 동부권 안전교육 체험시설 확충) 대규모 산단, 국제항 및 물류단지 등 대형시설이 집중되어 재해 및 재난에 취약한 경남 동부권 지역 안전 교육체험시설 확충

- 경상남도 내 안전체험 및 교육공간은 4곳이며,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도민이 체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체험시설 확대
- * 경남도 안전체험 및 교육공간 : 진주시 대형1개소, 합천군 중형1개소, 양산시 소형1개소, 창원시 소형1개소(2020년 기준)로 경남 동부권 지역 안전교육 체험시설 확충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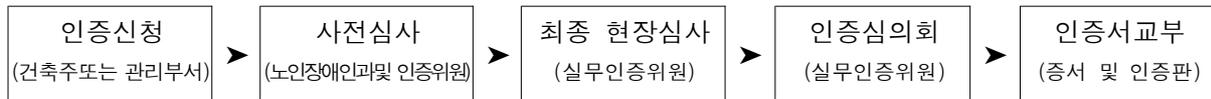
1.2.2 디자인으로 만들어가는 안전한 건축·공간환경

① (경상남도 BF 인증제 도입) 경상남도 BF기준 수립 및 인증제 도입

- 진주시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BF 인증제와 연계한 통합 운영 방안 검토 및 BF 인증이 규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 진주시 BF 인증제

- (인증대상) 도로, 공원, 건축물, 민간시설물((공동주택, 다중이용 건축물 등)
- (평가기준) 『무장애 도시 기본계획 및 BF 인증 기준』 참조
- (신청비용) 무료, 타 인증제와 달리 인증비용 면제 (※ 인증판 제작·부착 포함)
- (인증절차) 신청 시점 제한 없음



건축물	인증종류	등급	인증기관	인증년도
진주(부산방향) 휴게소	건축물	최우수	한국장애인개발원	2010
진주역사	여객시설	최우수	한국토지주택공사	2013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사옥	건축물	최우수	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남가람 문화거리 공중화장실	건축물	우수	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진양고등학교	건축물	우수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2018
신진주역세권 공원화장실	건축물	우수	한국토지주택공사	2018
신진주역세권 지하주차장	건축물	우수	한국토지주택공사	2018
진주충무공초등학교	건축물	우수	한국감정원	2019
진주 상봉어린이집	건축물	우수	한국감정원	2019
예하초등학교	건축물	우수	한국감정원	2019
경상남도교육청학생안전체험교육원	건축물	우수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2019

출처 : 진주시 무장애도시 홈페이지

② (무장애 공공공간 시범사업 추진) 고령자 및 장애인 출입 빈도가 높은 공

공시설의 주차장, 화장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우선 추진

- 산책로 및 진입공간 등을 개선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등을 확충하여 무장애 도시공원 조성



진주시청 장애인주차장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화장실



숲 데크로드

③ (경상남도 범죄취약지역 개선방안 연구) 범죄발생 데이터 및 공간정보 맵핑을 통한 도내 범죄취약지역 도출 및 지역유형별 개선방안 연구

- * 도내 범죄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연구기반을 마련하여 시군의 범죄예방 공간개선사업의 방향 구상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도록 추진
- * 지역 단위 시범사업은 김해, 양산, 하동 등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도 차원에서의 추진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 필요

④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기존 ‘안심골목길 사업’에 유희 건축물 활용을 더해 생활 인프라 및 커뮤니티시설을 동시에 보완하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확대 추진

- * 「경상남도 범죄취약지역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구도심 지역 중 범죄발생우려가 높으면서 주민참여 의지가 보이는 지역을 선정

※ 수원시 파장초등학교 안전마을 만들기 “아이파장”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무총리상 수상)

- 수원시는 노후되고 범죄우려가 있는 파장초등학교 일대(14만 7000㎡)에 안전 통학로·산책길·골목길 쉼터,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
- 2014년부터 전문가와 행정기관이 함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파장시장 상인회, 파장초 학부모, 파장동 통장과 주민협의체를 이루어 상호 협력적으로 설계과정에 참여



출처 : 월간공공디자인저널 홈페이지(<http://publicdesignjournal.com/Project/43>)

※[안전마을로 거듭난 대구비산7동] 우범지대 슬럼가 오명 벗고 '새 단장' (대구매일신문, 2017.09.30., 성일권)

- 대구광역시 비산7동은 인구 대비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고 염색 산업단지로 인한 악취로 고통 받고 있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과 음식물처리장과 인접하여 대구의 대표적인 우범지대였음
- 대구시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방범시설을 곳곳에 추가하고 유사시 신고가 용이한 형광색 기둥에비상벨을 설치하였으며, 가장 인적이 드물고 후미진 곳에 커뮤니티센터 '비단카페' 조성
- 마을 내에 있던 작은도서관과 빈 상가를 활용하여 사람들로 인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방법이 가능하도록 했고, 마을 주민들이 ‘안전지킴이’를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지킴이로 참여중



사진 : 좌측부터 대구서구청 공식블로그, 영남일보, 대구매일신문

전략2. 복합화로 다시 쓰는 공공공간 조성

◆ 빈집 등 유휴공간의 활용 및 기존 노후공공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효율 제고

배경 및 목적

-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빈집 발생문제 시급) 저출산·고령사회 지속에 따라 지방 소멸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1인 가구 및 빈집 증가문제 심각
- (폐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유휴공간의 발생) 주거안전 및 도시미관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폐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유휴건축물의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여 리모델링을 통한 활용방안 마련 필요
- (기존 공공건축물의 단편적 활용 및 노후화) 거점 공공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용도를 복합화하여 부족한 편의·커뮤니티 시설을 지원하고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 필요



지역의 노후 공간환경을 리모델링 및 복합화하여 부족한 SOC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과 함께 지역재생의 거점공간으로 활용

2-1. 노후·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활성화

2.1.1 빈집 정책 실행체계 구축

① (빈집 특례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도록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빈집 관련 조례개정

- * 인구 50만 이상의 경우 시·도는 별도 자치조례 제·개정을 적용하나, 50만 이하의 지자체에서는 도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므로 도 차원에서의 조례 제·개정 시급
- * 2019년 12월,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입법 추진하였으나, 철회한 상황

② (빈집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광역지자체(도)-기초지자체(시·군)-공공기관(경남개발공사, LH 등)-공공건축가-지역건축사-도시재생기업-지역주민 간 협력체계 구축

- * 지역단위에서 빈집 문제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관리, 활용지원을 위한 조직 구축

③ (경상남도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시·군 빈집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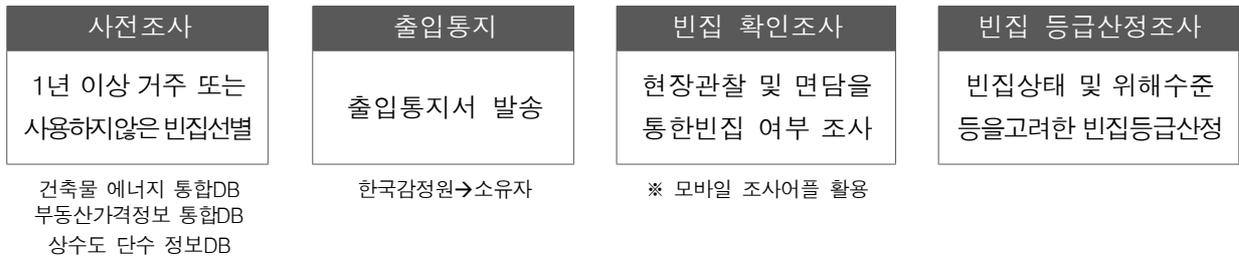
- * 지도기반의 공간정보를 연계한 빈집정보 구축을 통하여 빈집추정, 통계 입·출력, 실태조사 지원, 빈집정보 제공 및 공개 기능 지원
- * 시·군 빈집정비계획 수립현황 모니터링, 공간분석 데이터제공, 통계데이터 제공 등을 통한 18개 기초지자체의 빈집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며, 시스템 중복 구축을 통한 사회적 비용 소모 없이 일원화된 빈집뱅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음



④ (시·군 빈집실태조사 추진) 근거 기반 빈집정책 수립을 위한 시·군 실태조사 실시(한국감정원 대행)

- * 전기사용량 정보, 상수도 단수 정보를 통해 빈집현황을 추정할 수 있으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조사가 보완되어야 하며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 지표 생산 필요
- * 국토부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준용을 통한 실태조사 추진

[빈집 실태조사 단계]



⑤ (시·군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군 빈집실태조사 결과, 주변 어메니티, 배후지역의 공간 수요, 연계 가능 사업 등 조사를 통한 시·군별 정비 계획 수립 및 빈집밀집구역 지정

- * 빈집정비계획 시, 빈집이 일정 수준이상 밀집되어 있어 종합적인 대책과 효율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구역을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대책 도출
- * 빈집밀집구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하고, LH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공공지원 사업을 우선 검토



[빈집정비사업 개요]

출처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연구자 재구성

2.1.2 빈집활용 기반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 ① (경상남도 빈집뱅크 신설 및 운영방안 마련연구) 인구소멸 및 미분양주택 증가 등 경남 현안을 고려한 연구 용역 추진
 - * 빈집은 민간소유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의 지속적 매입을 통한 철거와 활용은 어려운 상황
 - * 빈집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빈집뱅크 포털을 개설하여 활용 가능한 빈집 및 공터에 대한 자발적 판매와 구매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편
- ② (농어촌 빈집 리모델링 숙박시설 지원사업) 빈집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 소유의 빈집을 매입하고 게스트하우스, 독채형 숙박시설로 리모델링
 - * 소유권 문제로 인하여 자발적 철거나 활용을 기대할 수 없는 빈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농·어촌 지역에는 관광요소가 충분하지만 숙박시설이 부족
- ③ (도민 빈집 실험학교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빈집 인테리어 교육, 도시재생교육, 창업교육 등 지원을 통한 빈집 리모델링 실험학교 운영
 - * (추진방향) 도민과 공공의 공동 기획으로 다양한 기술을 공유하며 동아리 공간, 마을창고, 온실, 마을 정원, 텃밭 등으로 빈집 및 유휴공간을 활용
 - * (기대효과) 실험학교 수료생을 지역 내 빈집 리모델링의 준전문가로 육성하여 도시재생의 인적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며, 주민모임, 봉사단체, 마을기업 등의 형태로 주민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어 공간의 지속적 재생 유도

※ 부산 봉산마을 빈집해결 시민건축학교(2018)

- 행정안전부 주최의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국민해결2018"의 소셜리빙랩 사업으로 선정되어 부산시민운동센터, 희망제작소가 함께 지원
- 아이디어공모전, 빈집탐사반, 빈집인테리어반, 나대지 조경반 등을 운영하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빈집해결 프로그램 운영



2.1.3 유휴공간 활용 시범사업 및 프로젝트 추진

① (빈집 철거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확충) 도심 내 방치된 유휴 사유지에 대한 무상사용 승낙을 통해 무료주차장을 조성하고, 학교·공공 기관 등 공공시설물의 업무시간 외 유휴되는 주차장을 도민에 개방하여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

* 도민 설문조사 결과, 거주지 주변환경에 불만족을 느끼는 동부 중추도시생활권(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함안군) 주민들은 '주차공간 부족 및 불법주차(18.2%) 항목에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

※ 창원시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 창원시는 2019년 2월부터 도심 내 2년 이상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사유지를 토지 소유자의 무상 사용 승낙을 거쳐 이웃주민을 위한 무료주차장으로 조성
- 시는 지방세법에 따라 공한지 제공자에게 재산세 100% 감면과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한 환경정비 지원을 하고, 빈집 정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빈집 부지를 3년 이상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면 신청인은 최고 300만 원의 주택철거비 보조



[창원 봉곡동 임시공영주차장]

출처 : 창원시 보도자료

② (마을과 지역대학생이 함께 하는 자투리땅 살리기 프로젝트) 낙후된 도시 환경의 자투리 대상지를 활용하여 마을과 지역대학생이 함께 공간 리모델링을 제안하고 시공하는 프로젝트 추진

* 공공건축가가 도시 내 대상지 후보군 선정, 제안서 심사를 하고, 선정 이후 멘토로 참여하면서 도내 대학생들과의 교류 체계 구축 및 총괄·공공건축가제도 홍보

※ 서울시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 자투리공간에 대한 관심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72시간 동안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도시공간에 생각을 담아 '의미있는 도시', '생기있는 서울'로 만드는 창작활동 프로젝트
- 작품은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부분 혹은 전체 존치중



[조성 이전]



[조성 이후]



사진 : 2018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우수상 <정류원 停留園>, 디자인스튜디오 도감 제공

2.2 저이용 공공건축물 복합화를 통한 생활SOC 확충

2.2.1 거점 공공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SOC 복합화

① (「경상남도 생활SOC 확충계획」 수립을 통한 생활SOC 확충 본격화)

지역별 공간정보 및 연령별 인구통계, 지역산업 등의 지역 여건 분석을 통한 생활SOC 현황 분석 및 유형별 취약지역 도출

- * 국비사업을 통한 생활SOC 건립 및 복합화 이후에도 지역에서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의 세부적인 확충계획 수립 필요
- * 생활SOC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란 보육시설·의료시설·복지시설·교통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

② (생활SOC 복합화 시범사업 추진) 「경상남도 생활SOC 확충계획」의

복합화 사업유형별 취약지역을 우선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생활SOC추진단이 추진 중인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공모

- * ‘생활SOC 복합화사업’ : 복수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리모델링 포함)하는 사업



③ (저이용 공공건축물 유휴공간을 활용한 복지·편의공간 확보) 시·군

공공건축물 현황 파악 및 주건축물의 용도, 규모, 이용층을 고려한 복지·편의공간 확보 시범사업

- * 사례 : “경남도청 갤러리” : 경남도청 공용공간 개방 / “지혜의 바다” : 폐교 활용 복합문화공간

2.2.2 전통시장 연계 지역문화 거점공간 확충

- ① (전통시장 매개의 지역문화 거점 연계 활용계획 수립)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전통시장의 입지적 특성을 활용한 대상지 일대 지역자원 및 잠재적 여건 활용계획 수립

* 커뮤니티의 구심점으로 활용 가능한 전통시장 현황조사 및 사업 우선순위 파악 후 추진

- ②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원도심 도시재생 시범사업) 도시재생사업 연계 및 민간기업과의 공생 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전통시장은 주로 과거 활발한 인구이동과 상권을 자랑했던 원도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전통 시장 활성화를 통해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 기대

*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등 민간기업과의 공생 방안 마련 시범사업 추진



2.2.3 다양한 발주방식 도입을 통한 우수 건축디자인 창출

- ① (지역건축사 대상 노후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제안공모) 노후공공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주제로 지역건축사 대상 제안공모 실시

* (제안공모방식) 리모델링 사업이나 주민, 관계자 등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공모안의 디자인 우수성보다는 설계자의 대응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도입

* 설계도면의 제출을 일체 금지하여 일반설계공모의 간이형식으로 오용 방지

- ② (소규모 공공건축물 간이설계공모)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사업 공모 시 설계도면 이외 제출물을 요구하지 않는 간이공모 도입

* (간이공모방식) 일반 공모와 마찬가지로 설계안을 제출받아 평가하는 방식이나, 적용대상을 소규모 건축물로 한정하여 참가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설계도면 이외 제출물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방식

전략 3. 기후변화에 지속가능한 스마트·녹색건축 조성

◆ 자연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상남도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친환경 녹색건축물 보급

배경 및 목적

○ 전국 평균보다 많은 경상남도 노후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필요

- 경상남도는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특히 단독주택의 노후도가 심각
- * 경상남도 주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응답자의 42.3%가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응답

○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경상남도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너지 효율 개선과 더불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필수

○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지는 재해·재난에 안전한 건축·도시공간 마련

- 2006~15년 자연재해로 인한 경상남도의 이재민은 3,895명, 총 피해액은 6,579 억원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 증가



3.1. 경남형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스마트·녹색건축물 보급

3.1.1 경남형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 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선도 강화) 노후 공공건축물 및 에너지다소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선도 모델 마련
 - 도내 공공건축물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공건축물 현황 및 에너지소비량 DB를 구축하고 국비지원 연계형, 도·시·군비 매칭형 등 그린리모델링 추진 계획을 마련

- ② (소규모 노후주택 에너지성능 지원계획 수립) 경상남도의 건축물 노후도 및 유형을 고려한 도 차원의 소규모 노후주택 에너지성능 향상 및 관리 대책 마련
 - 노후주택 에너지성능 진단, 보조금 지원 대상 선별, 에너지성능 개선사업 범위 정립, 재원 확보방안 등 체계적인 그린리모델링 지원방안 마련



[경상남도 노후주택 개선 사례 ‘더불어 나눔주택’]

- ③ (지역 커뮤니티시설 그린리모델링 추진) 지역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시설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녹색건축에 대한 체감 및 홍보효과 확대
 -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등 도내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 중 시·군의 공모를 받아 중앙부처 시범사업 재원 확보가 용이한 대상과 도·시·군비 지원 대상을 구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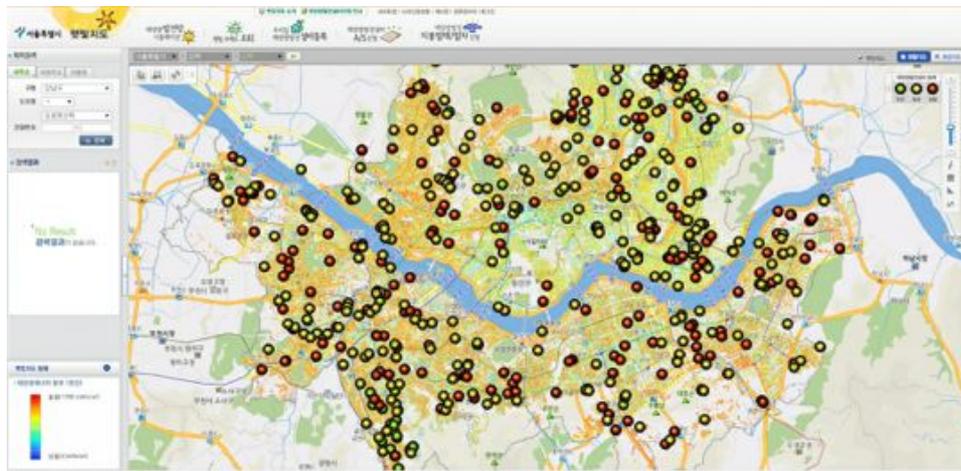
[경기도 포천시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례]

3.1.2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저탄소사회 구현

① (태양광 잠재 발전량 및 설치지역 파악) 태양광 잠재 발전용량 분석 및 설치가능 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DB 및 플랫폼을 구축

※ 서울시 햇빛지도 구축

- (태양광 발전량 시뮬레이션) 사용자가 선택한 건물 및 건물 옥상의 임의의 면적을 지정하여 태양광입사량, 연간 전기생산량, 이산화탄소 감소량, 비용절감액 및 월별 전기생산량을 시뮬레이션
- (햇빛주제도 조회) 사용자가 건물 태양광에너지 등급도와 태양광에너지분포도를 월별/분기별로 조회



②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결합형 녹색건축물 보급) 마을 단위의 공동체가 주도하는 에너지 생산 및 공유체계를 도입한 스마트·녹색건축물 보급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 및 경제적 이익 창출

- 빈집, 유휴공간 등에 공동체가 관리하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이를 공유하는 스마트·녹색건축 연계 모델로 구성된 마을단위 태양광 지원사업을 추진

3.1.3 제로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시범사업 발굴

①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대응체계 구축) 단계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대응을 위한 도 차원의 전략 강화 및 지원 계획 수립

- 국가 주도로 추진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정책을 대비하기 위한 경상남도 인허가 현황 및 신축 추이 분석, 적정 설계기준, 인센티브 등 계획 수립

	'20년	'25년	'30년
기 존	공공건축물 (연면적 5백~3천㎡)	민간·공공건축물 (연면적 5백~5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민간·공공 건축물 (연면적 5백㎡ 이상)
수 정	공공건축물 (연면적 1천㎡ 이상)	공공(5백㎡ 이상) 민간(1천㎡ 이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	민간·공공 건축물 (연면적 5백㎡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②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추진) 공공주택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국비 시범사업과 연계한 지구단위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 추진

-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한계가 있는 고층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대응을 위해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정제도를 활용한 지구단위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홍보자료]

3.2. 기후변화에 적응력을 갖춘 건축·공간환경 조성

3.2.1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상남도 농산어촌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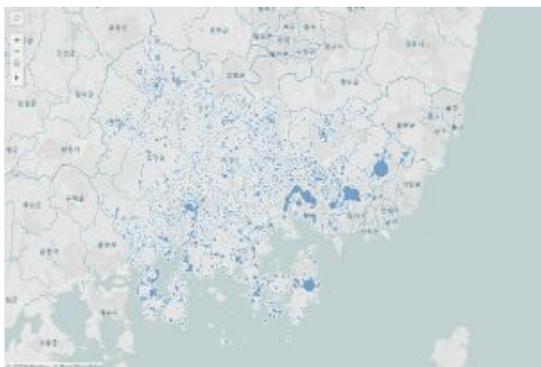
- ① (재해·재난 대피시설 취약지역 파악) 임시대피시설, 임시격리병동 등 재해·재난 발생시 대피시설이 취약한 도내 지역을 마을규모 단위로 파악



[재해·재난 대피시설 관련 보도자료]

출처 : MBC

- ② (지역 커뮤니티 시설 안전성능 진단) 자연재해,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이재민 또는 일시 대피령 발생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건축물 안전성능을 진단해 임시주거시설로서의 안전성능 점검
- 기 지정된 임시주거시설과 마을회관, 경로당 등 지역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구조안전성능, 내진성능, 내화성능 등 안전기능 점검을 위한 진단조사 실시
- ③ (무더위 쉼터 기능 확대 통한 우리동네 방재쉼터 조성)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기존 커뮤니티 시설에 폭염·폭설·지진·화재 등 대피소 기능을 보강하여 ‘우리동네 방재쉼터’로 조성하고 마을 홍보 추진



3.2.2 폭염, 홍수 등 하절기 이상기후 대책 마련

① (하절기 이상기후 유형별 취약 건축물 파악) 취약계층 거주지, 노후 구도심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폭염 취약형, 홍수 취약형, 폭염·홍수 복합 취약형 등 유형별 취약 건축물 파악

- 반지하 건축물, 하천 및 해변 인근 건축물, 환기성능이 낮은 노후주택지, 불법건축물 등 하절기 이상기후 유형별 취약 건축물을 파악해 개선사업 대상 선별



② (지역맞춤형 옥상녹화 및 쿨루프 사업 추진) 지역과 건축물 특성에 적합한 옥상녹화 사업 및 쿨루프 사업을 병행 추진

-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옥상녹화 사업을 추진하고 옥상녹화가 어려운 노후주택에는 쿨루프 사업을 추진

[옥상녹화 사업 및 쿨루프 사업의 특성과 주요 효과]

구분	옥상녹화	쿨루프
적정지역	도심지 등 녹지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적합	농어산촌등 비교적 녹지가 풍부한 지역에 적합
건축물 유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 구조적 안전이 확보된 건축물	민간 노후주택 / 구조적으로 취약한 노후건축물에 적용 가능
시공	일정 공사기간과 시공기술이 필요	비교적 빠른 시공 및 시공난이도 용이
효과	폭염저감, 단열 효과, 쉼터 조성, 부족한 녹지 확보	폭염 저감, 겨울철에 일사열 획득에 불리
유지관리	쿨루프사업 대비 높은 유지관리 비용 / 유지관리가 용이한 식재로 변경되는 추세	적은 유지관리 비용 / 페인트벗겨짐 등 매년 유지관리 실태 파악 필요

③ (건축물 차양설치 및 우수활용 권장) 건축 인허가시 하절기 폭염발생 일수 및 강수량 증가 추세를 고려해 건축물 냉방부하 저감 및 우수활용 기준을 적용 독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녹색건축인증」 등에 기 수립되어 있는 차양설치 및 우수활용 기준을 준용하도록 권장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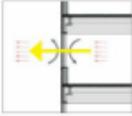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창호 설계 가이드라인

1.2 창호 설계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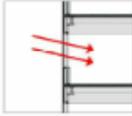
1.2.1 창호 성능 요소

■ 열전달률 (U-factor 또는 U-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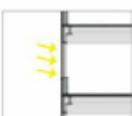
열전달률이 0.1 이하로 낮아질수록 구동제 냉방 부하를 줄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창호 설계가 중요하다. 단, 창면적비가 40% 이하이고 SHGC가 낮은 유리 필름 적용한 경우에는 차양 설치에 따른 건물실 내부 온도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열전달률은 창면적이 1㎡인 물체를 시뮬레이션하여 1℃당 매 물체를 통한 열유량을 W(와트)로 측정한다. 단위는 W/m²로 표시한다. 창호의 열전달률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관련 규정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항 관련 '별표 4. 차양별 건축물부하의 열전달률'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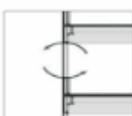
열관류율



SHGC



가시광선 투과율



가시광능

2.1 중부 지역

■ 차양

- 남향 창호는 수평 차양에 의한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크므로 차양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창면적비가 40% 이하이고 SHGC가 낮은 유리를 적용한 경우에는 차양 설치에 따른 건물실 내부 온도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열전달률이 낮은 유리를 적용한 경우에는 차양 설치에 따른 건물실 내부 온도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다.
- 북향 창호는 수평 차양 설치에 의한 에너지 절약 효과가 매우 적으므로 차양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 동향이나 서향 창호의 경우에도 수직 차양을 설치하여 요구량을 절감할 수 있으나, 남향에 설치한 수평 차양과 비교하면 절감 효과가 적다.
- 특히 SHGC값이 높은 창호를 적용하거나 창면적비를 40% 이상으로 높여야 할 경우, 외부 차양 설치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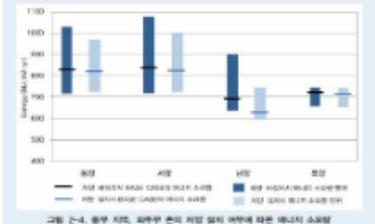


그림 2-4. 중부 지역, 최우우 온도 차양 설치 여부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BASE CASE : 창면적비 40%, 창호 TYPE 1, 30%외벽 비적용
에너지 소비량 범위 : 창면적비 20~60%, 창호 TYPE 1~4, 30%외벽 비적용 CASE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창호 설계 가이드라인]

전략 4. 지역 건축역량 강화 및 건축행정 선진화

◆ 건축산업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건축행정 내실화를 위한 조직 및 전담인력 운영방안 마련

배경 및 목적

○ 청년인구 감소추세와 건축서비스산업 사업구조 열악

- 지역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육성 및 시장 경쟁력 확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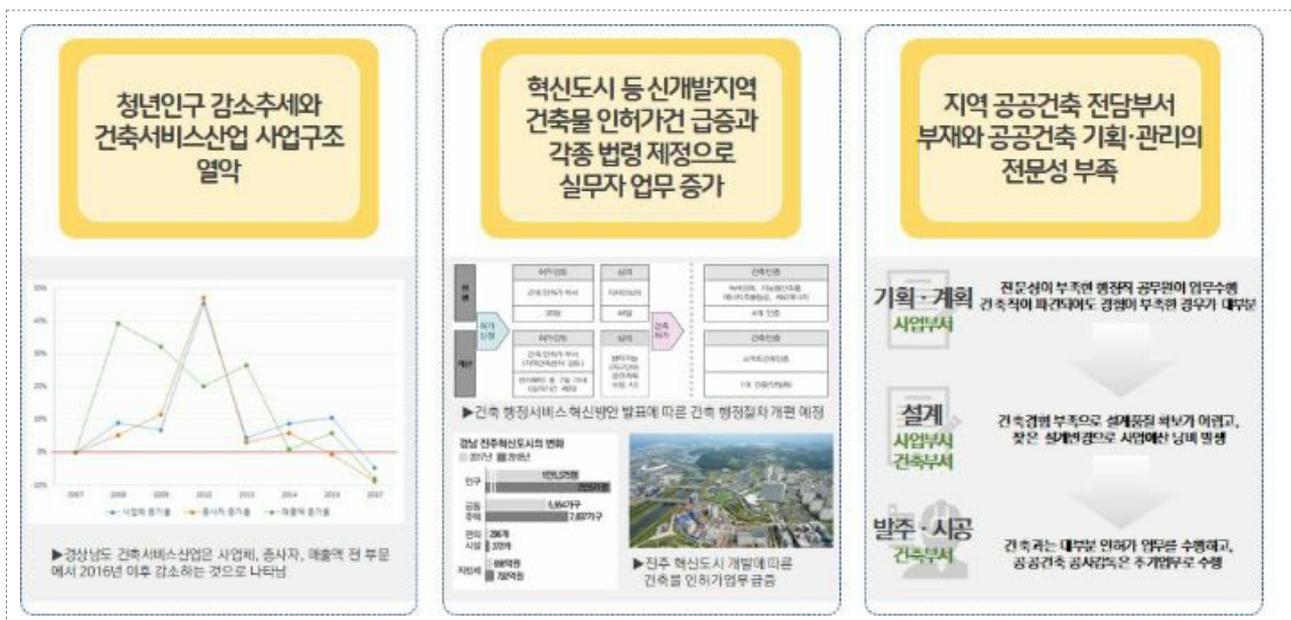
○ 혁신도시 등 건축물 인허가건 급증과 각종 법령 제정으로 실무자 업무 증가

-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건축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건축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함께 지역 건축안전센터의 설립 적극 추진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

○ 지역 공공건축 전담부서 부재와 공공건축 기획·관리의 전문성 부족

- 총괄건축가를 중심으로 도내 공공건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역 내 공공건축 기획단계를 보장할 필요

*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건축정책 실행에 있어 공공건축 전담부서의 부재와 개별 업무단위 사업추진으로 인한 부서간 협조 미비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



4.1. 경상남도 미래 건축시장의 경쟁력과 다양성 확보

4.1.1 건전한 건축설계시장 환경 구축을 위한 건축사사무소 실태조사 실시

- ① (지역 신진건축가 및 우수건축가 현황 파악)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건축사들과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신진건축사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동향 파악
 - 「건축사법」 제9조, 23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만 45세 미만의 ‘신진건축사’를 포함, 지역 인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를 위한 현황 파악
- ② (경상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기초통계 및 현재 실태조사로는 경상남도 건축서비스산업 동향 파악에는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실태조사 시행을 통해 경상남도 건축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DB 구축
 - 지역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경상남도 건축사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실태조사 사례

- (개요) 예술인 실태조사는 1988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되며,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의 경우 2013년에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실행
- (조사대상)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등 총 14개 분야별 활동 예술인을 대상으로 조사
- (조사내용) 활동분야 및 내용, 고용형태 및 근로환경, 생활 및 복지 등 3개 분야 약 21개 항목에 대해 조사 수행



4.1.2 경상남도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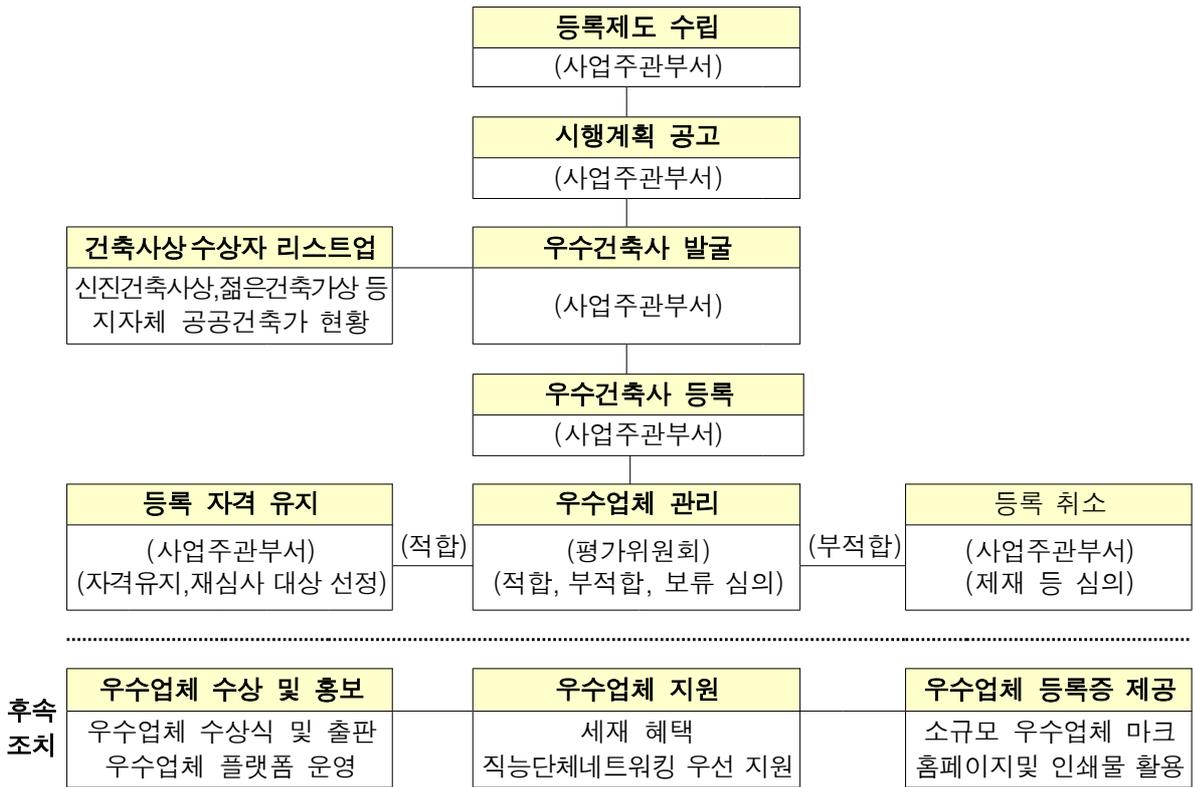
- ① (지역 대학교 연계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지정) 우수한 건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지역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 대학교와 연계한 교육기관 지정
- 공공건축, 녹색건축, BIM 등 건축분야와 관련된 최신 트렌드 및 관련 교육을 수행하는 지역 대학교와 연계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방안 검토



- ② (건축시장 창업지원 프로그램 시범 운영) 지역의 공공 및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건축설계, 건축자재 등 건축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활동할 수 있는 코워킹 공간 구축 및 창업 공모

4.1.3 지역건축가 및 우수건축 업체 홍보 및 업무범위 확대

- ① (건축사사무소의 업무범위 제도 개선)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 사업 등 건축사사무소 참여범위 확대방안 마련
- 경상남도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참여업종 사례를 살펴보고 건축사사무소의 현실적 참여 타당성 검토 및 건축문화 부문과 연계한 전문가 교육 수행
- ② (지역 우수건축가 활용계획 수립)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산업 육성을 위해 도 단위에서의 계획 수립 및 세부 활용 가이드 마련
- ‘창업지원’, ‘교육지원’, ‘포상’, ‘공모사업’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본으로 하되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실질적 이용을 목표로 계획 수립
 - 도립미술관 등을 활용한 지역 건축가 작품 전시를 기획하여 지역 주민-건축가 간 교류 확대



[소규모 건축 우수건축사 등록제도 흐름도]

- ③ (우수건축 설계·시공 업체 정보제공 플랫폼 개발) 건축물 신축, 리모델링, 소규모 정비, 대수선 등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쉽게 접하고 우수한 건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보제공 플랫폼 개발 추진
- 우수 건축가, 공공건축가 등 건축가 정보와 우수설계업체, 우수건축공사업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플랫폼 구축을 통한 홍보기능 수행

4.2. 효율적인 건축행정기반 구축

4.2.1 경상남도 건축지원센터 설립 추진

- ① (경상남도 건축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지역 공공건축 관련 업무 증가, 지역 건축안전센터 업무범위 확대 등 지역 건축지원 업무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경상남도 건축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지역 건축안전센터 추진 사례를 조사하여 경상남도에 적합한 지역 건축지원센터 유형, 전담조직, 설립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 ② (경상남도 건축지원센터 운영방안 마련) 근거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지원센터의 운영 형식, 업무 범위, 재원 확보 등 구체적 운영방안 마련
- 공공건축지원센터와 건축안전지원센터 운영 방식(독립운영 또는 통합운영, 광역지원 센터 또는 기초지원센터),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전담조직, 재원확보 방안 등

「건축법」 제87조의2(지역 건축안전센터 설립)

-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다.
1.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 1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자문 응답)

- ③ (경상남도 건축지원센터 설립근거 조례 제정) 경상남도 건축지원센터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건축지원센터 설립과 관련된 업무, 재원, 조직 구성 등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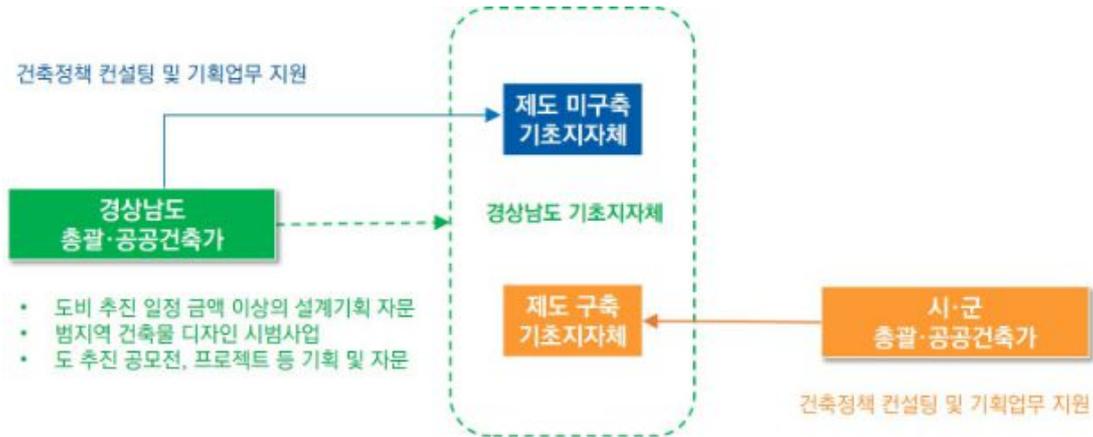
- ① 시장·구청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 ① 구청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4.2.2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①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 세부운영계획 수립)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역할별, 기간별 운영계획 수립
- 간담회 개최를 통한 도·시·군간 역할 및 운영계획 수립방안과 단기·중기·장기 제도운영의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



[도와 시·군의 총괄 및 공공건축가 역할 비교]

- ② (총괄 및 공공건축가제도 활용 매뉴얼 배포) 총괄 및 공공건축가가 부재한 시·군이 경남도의 총괄 및 공공건축가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역할 체계 정립 및 절차에 대한 경상남도 맞춤형 매뉴얼 작성 및 배포
- 총괄·공공건축가제도 활용 매뉴얼은 도·시·군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창구 기능을 수행하며, 건축행정 체계 정착 지원을 도모

「건축법」 제22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3.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 등

③ (시·군 건축직 공무원 워크숍 정기 개최) 시·군 건축직 공무원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도·시·군 간 업무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하는 건축행정체계 구축

*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군 건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 결과 정기적인 공무원 워크숍 개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④ (경상남도 공공건축 포럼 추진) 경상남도의 건축 도시 이슈를 주제로 한 기획 토론회를 개최

- 건축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도와 시·군을 아우르는 공공건축가 인적 네트워크 구축
- 도, 시·군 건축직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생 등이 어우러질 수 있는 학술포럼으로 기획하고 경상남도 건축문화제와 통합으로 운영 검토



전략5. 경남 건축자산을 활용한 지역정체성 확보

◆ 근대건축문화유산, 한옥, 현대건축물 등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한 기틀 마련 및 사회적 변화에 맞춘 현대적 활용 방안 수립

배경 및 목적

- 기 구축한 근대건축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15)의 후속 관리·운영 필요
 - 근대건축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리 부족으로 철거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건축자산을 활용한 지역 정체성 및 장소성 재생에 대한 관심 증대
 - 건축자산 활용을 위해 민간소유주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건축자산 수집·관리·활용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필요
- 한옥 및 목조건축의 보급·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공적 활용·관광화 방안 모색 필요
 - 경상남도 한옥수와 인허가수는 전국 상위권이나 활용 프로그램은 다양하지 않은 실정으로, 한옥의 공적 활용을 통한 이미지 제고 및 한옥 보급 확산 기대

<p>지역성장 동력으로서 건축자산 아카이브와 실질적 정책·사업 추진기반 구축</p>  <p>▶ 경상남도 근대건축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 운영 서비스</p> <p>▲ 창원 삼광형주 철거 전(2011), 후(2019)</p>	<p>건축자산의 창의적 이용과 지역사회의 이익 창출을 위한 노력</p>  <p>전문가설문 정책 우선순위 2위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및 재생사업</p> <p>THE IVY HOUSE</p> <p>▶ 영국 건축자산을 이용한 커뮤니티 센터 Ivy House R&D, 개발 4억에 차인 건축비용을 증자건축물로 증분하고 지역 커뮤니티 차원으로 계속 관리</p>	<p>경상남도 한옥의 체계적 관리와 경상남도 목조건축의 경쟁력 확보</p>  <p>▶ 한국형 목조건축 (경기 가평 북한강 물연재 전통주택 단지 전경과 커뮤니티 센터(송북초))</p> <p>▲ 산형 남사매담은 전경</p>
---	---	--



건축문화 성장 동력 및 지역 사회의 발전 견인을 위한 건축자산의 보존·관리부터 창의적 이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 정립

5.1 건축자산의 체계적 보존과 진흥을 위한 기틀 마련

5.1.1 건축문화 아카이브 관리·운영 고도화

- ① (기 구축한 근대건축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계획 및 활용방안 수립) 근대건축문화유산 신규 발굴 및 변동사항 조사 등 지속 모니터링
- 근대건축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예산 편성과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업데이트 병행
 - 건축물 철거 신고 접수를 받는 관할 건축과에서 오래된 건축물의 철거 신고 시, 운영 중인 행정시스템을 근대건축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와 연계 운영하도록 제도화

※ 서울시 종로구 한옥 철거 방지 대책 사례

-건축물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 시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존·활용, 이축방안, 특례 적용 관련 지원



출처 : 심경미 외, 기존 한옥의 보존·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방안 연구(2012), p.4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진 재구성

- ② (건축문화자산 유형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역사·문화적 특성을 가진 다양한 유형의 건축자산을 조사·공유하여 고유한 건축공간 이미지 형성
- 현대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우수건축물, 한옥 등 다양한 범주의 건축문화자산에 대한 유형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도내의 건축상 수상 건축물 등 우수 현대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정리
- ③ (건축문화 관련 홍보 플랫폼의 일원화) 건축문화 행사·축제·수상작에 대한 홍보 및 성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건축문화 관련 행사·축제·수상작에 대한 홍보 및 성과를 수집·축적하고 이를 한 플랫폼에 일원화하여 공유
 - * 플랫폼 안정화 이후, 건축 관련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전문 플랫폼으로 개발

※ 경기건축포털 사례

- (카테고리 분류) 건축정보, 건축문화, 녹색건축, 집합건물 관리 메뉴로 구성
- (건축문화 부문 주요내용)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경기건축문화제, 아름다운 경기건축, 건축분야 관계자 교육, 건축자산진흥,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대해 소개



[경기건축포털 홈페이지]

- ④ (도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마련) 도민이 일상에서 접하고 애정을 갖고 있는 장소를 발굴하여 수집
- 경상남도 건축자산 지킴이(가칭) 등 지속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일반인 대상 모임 구성을 통해 활동 조직 마련
 - 건축경관사진대전을 개최하여 일반인의 시선으로 지역 우수경관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건축문화 관련 통합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아카이브하고 온라인 홍보 추진

※ 노르웨이 국립 관광도로 경관 아카이빙

- (주요내용) 노르웨이 국립관광도로 홈페이지에서 18개 경관도로에 대한 이미지 정보를 제공
- 모든 이미지는 경관도로의 위치, GPS 정보, 사진작가 정보, 사진 해상도 정보를 함께 제공하며,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무료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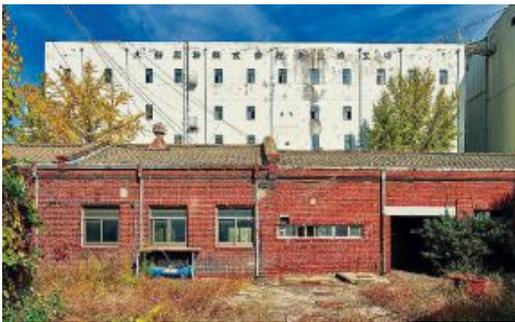
출처 : 노르웨이 국립관광도로 홈페이지 <http://foto.turistveg.no>

5.1.2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

- ① (건축자산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건축자산의 ‘조사-지정-모니터링’ 과정을 명확히 규정하는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
- 경남건축문화유산 60선에 대해 소유주 동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도 등록문화재 등재를 추진
 - 지정·등록된 건축자산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업무 협조 체계 구체화
- * 건축문화유산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야만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한계 존재하며, 사유 재산 주장에 따른 갈등 발생이 불가피하기에 관리와 보존대책 수립을 검토
- ②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종합관리계획 수립) 건축자산의 무분별한 훼손·멸실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진흥기반 구축
- 도 차원에서의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하되 ‘근대건축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15)’ 구상과 연계
 - 다수 건축자산을 보유한 시·군별 기초 지자체는 관련 법률 및 조례를 적극 활용하여 시·군별 시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

※ 서울시 건축자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 사례 -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16)

- (개요) 건축자산에 대한 조사·발굴·관리·활용을 위한 실천과제와 전략을 담은 서울시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2022년까지 3대 실천과제 11개 전략(30개 세부사업)을 단계적 추진
- (주요내용) 한옥 포함 근·현대 건축물과 공원·시장 등 공간환경, 기반시설까지 건축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자산 패러다임을 ‘보존을 위한 규제’에서 ‘적극적 활용을 위한 지원’으로 변화



[영등포 대선제분 공장]



[사직동 캬벨 선교사 주택]

출처 :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2019),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

- ③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근대건축물이 밀집해있는 곳을 건축자산 진흥 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랜드마크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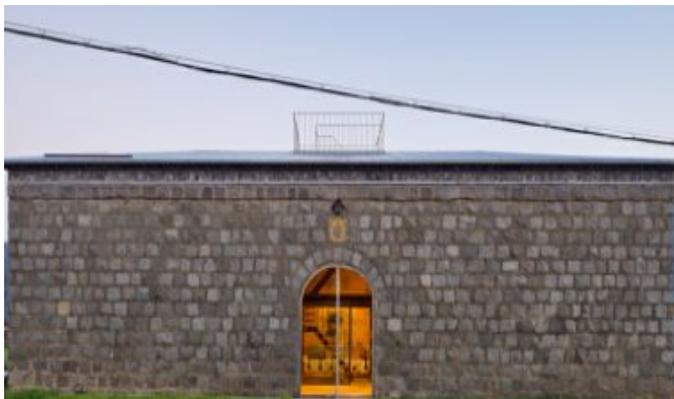
5.2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자산과 한옥의 자원화

5.2.1 건축자산의 관광·문화 상품화를 통한 활용 확대

- ① (도시재생·SOC 사업과 연계한 건축자산 자원화 구상) 도시재생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훼손 멸실되는 건축자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재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건축자산 자원화 검토를 통해 지역의 건축자산을 활용한 연계 방안 수립
 -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23개소 53개 시설을 유휴 건축자산과 연계

※ 경남 남해 돌창고 프로젝트

- (개요) 경남 남해군 서면 대정마을에 위치한 돌창고(1965년 건축)와 삼동면 시문마을에 위치한 돌창고(1967년 건축)는 마을에 양곡과 비료를 저장하기 위한 창고용으로 농업협동조합에서 만들었으며, 2005년 농협에서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
- (주요내용) 남해의 민요를 들려주는 공연 '남해소리'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전시·공연·출판을 통해 새로운 지역가치를 재생산하기 위해 노력



사진/본문 출처 : SPACE(https://vmSPACE.com/report/report_view.html?base_seq=MzYy)

본문 출처 : 남해 돌창고 공식홈페이지(<http://dolchanggo.com/>)

- ② (민간소유 건축자산 보존을 위한 민간소유주 지원 방안 마련) 민간 소유의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대표 우수 건축자산은 공공소유 전환을 고려하고 세제혜택, 수리지원비 등 도비 지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화
 - 우수 건축자산 민간소유주가 건물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 민간소유 건축자산을 지자체가 매입하여 보존한 사례 - 서울 시 서촌 체부동 성결교회

- (주요내용) 서울 서촌의 대표적 근대 건축물로 4대문 안에서 가장 보존가치가 높은 벽돌식 건축물로 평가
- 주민이 떠나고 신도가 줄어들며 교회 건물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 교회로부터 서울시가 2014년 매입 후 재생사업을 거쳐 2017년 우수 건축자산 제1호로 등록하고, 이후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로 사용 중



출처: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좌), 중앙일보(우)

③ (건축문화자산의 관광 활성화) 시대적으로는 현대·근대건축물을 포함하고, 건축적 용도로는 미술관, 박물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범위의 건축문화자산을 포함하여 관광화

- 축적된 정보를 도민뿐만 아니라 경남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 홍보
- * 지역 유명문인들의 문학작품, 골목거리, 축제, 예술 프로그램, 먹거리 등과 연계하며 연령대별로 서비스 대상 세분화

5.2.2 한옥 및 목조건축의 현대적 활용을 통한 한옥·목조건축 문화 확산

① (한옥 및 건축자산 전수조사 시행) 국가한옥센터 지원을 통해, (1단계) 시·군별 집합적으로 위치한 지역을 우선 조사하여 현황 파악 → (2단계) 밀집도가 낮은 구역을 포함한 점진적인 한옥 전수조사 시행

※ 국가한옥센터 한옥 전수조사 공모사업

- (주요내용)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한옥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지자체 공모를 통한 한옥 전수조사 추진
- 지역별 한옥 분포 현황, 지붕형식 및 재료, 한옥등급 등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한옥 지원정책의 세분화 방안을 위한 기반 마련



[대구광역시 중구 한옥 분포현황도]

출처 : 서수정 외, 한옥 보전 및 육성을 위한 한옥 전수조사 1, 대구광역시 중구(2013), p.8, 건축도시공간연구소

② (도내 한옥 및 목조 공공건축물 건립) 한옥 및 목조건축 문화 확산과 보급을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서 공공건축물을 한옥 및 목조건축 건축양식으로 건립

※ 한옥 공공건축물 사례



[갈계숲옛마을문화회관(경남 거창군)]

출처 : 국가한옥센터



[글마루 한옥도서관(서울 구로구)]

출처 : 국가한옥센터



[최참판댁한옥문화관(경남 하동군)]

출처 : 하동군

③ (기존 한옥매입을 통한 공공한옥 활용) 활용과 보존의 가치가 높은 한옥을 단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작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 SOC시설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한옥문화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

※ 서울시 ‘살아보는 공공한옥’ 사업

- (개요) ‘살아보는 공공한옥’은 북촌 일대 주거지에 위치한 서울 공공한옥을 주거용 한옥으로 조성해 한옥살이 단기체험을 원하는 시민에게 임대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한옥 사업
- (입주자 모집) 공개경쟁입찰
- (참가자격)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최대 4인 이하
- (거주조건) 임대기간 동안 체험수기 작성 및 공유

④ (한옥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한옥 체험업 인센티브제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에 적극 공모하되, 공모에 선정되지 않거나 이미 최대 지원연수(3년)를 달성한 한옥체험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제도 구축

※ 경상남도 한옥마을 예시



[산청 남사에담촌]



[고성 학동마을]



[함양 개평마을]

출처 : 연구진 촬영(좌/중앙), <http://12go.co.kr/storyDetail.do?idx=3647>(우)

1) '19년까지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이었으나 '20년부터 사업명 변경

전략6. 소통하고 참여하는 건축문화 기회 확대

◆ 건축문화제의 체계적인 기획·운영을 위한 지원 및 건축교육을 확대하고, 경상남도의 경관 잠재력 발굴 및 시민 체감도 증진

배경 및 목적

- 경남 건축문화제 개선 및 도민 인식 향상을 위한 건축문화 교육 확대 필요
 - 경남건축문화제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 구성과 연령대별 특화된 건축교육을 통해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선진 건축문화 증진
- 시민이 배제된 경관사업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체감도 저하
 - 매년 다양한 경관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이 배제되어 있으며,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경관사업 플랫폼을 도입하여 시민 체감도를 높일 필요
-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한 경상남도의 경관 잠재력 향상 필요
 - 대규모 개발사업, 관광거점 개발보다 지역의 좋은 관광자원, 우수한 경관요소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가치 지향적 개발방향으로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



시민참여 기반의 건축문화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경관자원의 가치와 잠재력을 이용한 경관 경쟁력 강화

6.1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행사 및 교육 확대

6.1.1 건축문화 행사·축제 및 건축도시 관련 사업의 주민 참여 활성화

- ① (경남건축문화제 기획 및 운영 안정화 방안 마련) 문화제조직위원회를 도청 산하기관으로 별도 조직하여 안정적인 관리·운영능력 확보
 - CI 등 경남건축문화제가 표방하는 대표 상징 이미지를 구축하고 건축문화제 홍보 및 주요 성과 축적
- ② (경남건축문화제 콘텐츠 다양화 및 도민 참여 확대) 도민들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및 참여 기회 확대
 - 근대건축 보존·활용과 리모델링을 독려하기 위해 신축 건축물뿐만 아니라 우수재생, 재활용 건물 및 설계자에 대한 지원과 수상도 병행

※ 건축문화제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사례

- (주요내용) 축제에 참가한 청소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구 및 과자 등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사물을 활용하여 직접 손으로 건축물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 오픈하우스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어려웠던 미공개 건축물·시설 및 건축사사무소를 소개하고 대중의 관심 제고



[독일 베를린 2018 Aedes 건축포럼의 과자로 만드는 도시 체험 프로그램]



[오스트리아 빈 오픈하우스의 건축물 투어]
출처 : Aedes 건축포럼(좌), Open House Wien 인스타그램(우)

- ③ (지역 사업과 연계한 찾아가는 경관교육 시범사업)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경관교육을 수행하고, 해당 지역의 경관협정 체결 유도
 -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촌뉴딜사업 등 원도심 및 구도심 개선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경관교육 시범사업 추진

6.1.2 연령대별 건축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① (초·중·고등학생·시니어 대상 건축 문화 교육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 (청소년 대상) 자유학기(년)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학교 교육을 통한 기초 건축교육을 실시하고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초·중·고 연계교육 확대
- (시니어 대상) 도민건축대학 운영 관련, 경상남도의 건축자산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발굴과 함께 다양한 시민건축학습 프로그램 확대
- * 특히, 기존의 창원·진주·김해 도민뿐만 아니라 소도시 및 농어촌 도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시·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강좌에 건축 관련 프로그램을 추가 및 연계함으로써 도민들이 건축에 대하여 더욱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② (기초교육 과정과 연계한 건축문화 교육 협정) 경관기초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방과 후 학습, 동아리 활동 등 기초교육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전문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한 시범 교육 실시

③ (민간건축주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민간건축주 대상 좋은 건축 설계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경남도청-건축사(가)협회 주체로 ‘건축주 학교(가칭)’를 설립하고, 기획/설계/시공/유지 관리 등 건축과정과 건축의 공공성에 대한 지속적 교육
- 건축주를 대상으로 '좋은 건축주'상과 같은 시상을 통해 의식 고취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0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 조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사도 지시는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 가능
- * 지정된 우수 건축물등의 보수나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 감면 가능

※ 민간건축주 및 발주자 시상 사례(네덜란드 골든 피라미드 상)

- (주요내용) 2003년부터 디자인 및 건설 과정에서 귀감이 되는 역할을 한 발주자에게 수여하며, 건축, 도시계획, 경관, 인프라, 공간계획 등 매년 다른 주제를 선정하여 시상
- 수상자에게는 50,000유로의 상금(네덜란드 국가건축정책 예산)



출처 : 골든 피라미드 홈페이지 www.goudenpiramide.nl, '제2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보고서(2015), p.117, 서울시'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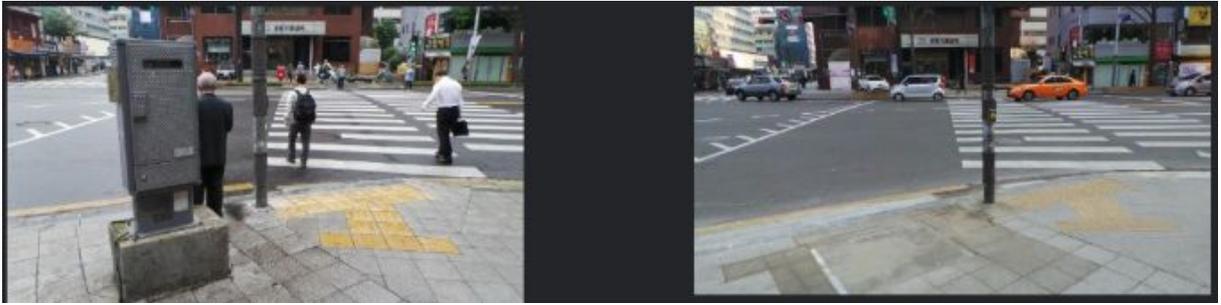
6.2 문화와 경관이 어우러지는 경상남도 장소 형성

6.2.1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경관사업 시행 및 체감도 증진

- ① (눈이 편안한 도시만들기 사업) 경관 향상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설치된 조형물이나 시설물,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시설물, 쉼터, 도로포장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정비사업 시행

※ 도시비우기 사업(서울 특별시 종로구,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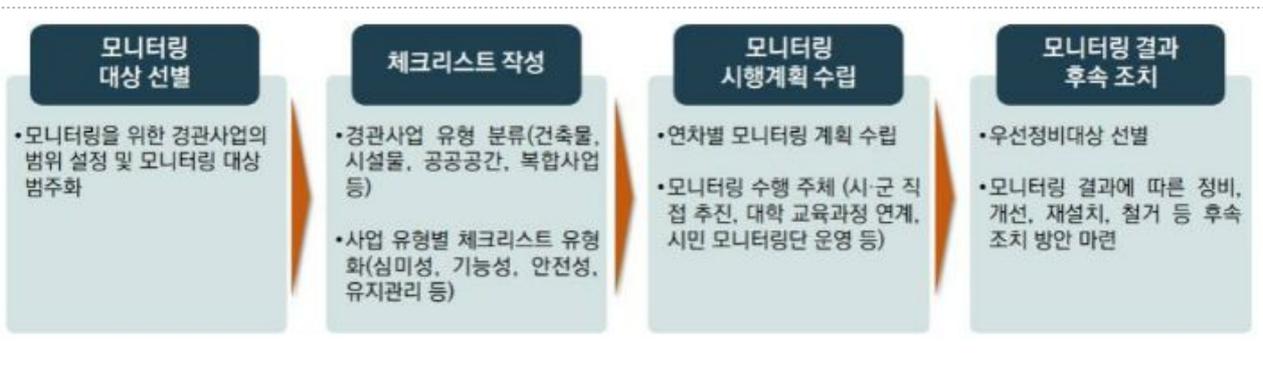
- (개요) 서울시 종로구는 2013년 도시비우기 전담팀을 신설하고, 2015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시 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
- (주요내용) 불필요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 철거, 중복되거나 유사기능 시설물은 통합, 노후·훼손된 시설물정비, 시설물 설치관련 설계단계부터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조정으로 미리비우기 추진



- ② (경관 개선을 위한 도민참여 시스템 마련) ‘마을경관 어플리케이션’ 등 주민이 참여 가능한 플랫폼 개발 및 도민 의견 수렴

* ‘눈이 편안한 도시만들기 사업(가칭)’과 연계하여 일상생활(주거 및 도심지)에서 경관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경관 장애 요소에 대한 의견 수렴

- ③ (시민 중심의 경관사업 모니터링으로 지역 경관 개선) 경관사업 시행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결과 모니터링 수행 및 지속 관리 시행



6.2.2 지역 경관자원의 가치 발굴 및 연계협력 사업 추진

① (경상남도 경관도로 발굴 및 선정) 국도와 지방도를 중심으로 우수드라이브 구간 후보군을 발굴하여 경관루트 선정

- 고속도로보다 경상남도를 순환 및 관통하는 도로와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루트로 구성

경상남도 경관도로 선정기준 예시

- 구간지정기준 : 경관 경험의 연속성과 주요 거점 간 연결성을 위해 20km 이상으로 지정
- 도로선정기준 : 고속도로는 제외하며, 지역, 마을 또는 관광거점을 연결하는 국도, 지방도
- 우선지정기준 : 중앙정부사업과 연계 가능한 도로, 또는 기존 경관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 경관자원보유 : 산, 해안, 호수, 가로수 등 자연경관 또는 산촌, 어촌 등 마을 경관 등 경험 가능한 독특한 자원을 보유한 지역



[고성군 국도변에서 바라본 남해 경관과(좌) 주변 학동마을 옛 담장길(가운데), 하동 벚꽃길(우)]

② (경관도로 브랜딩 공모전 개최) 경남도민을 포함한 전국민이 참여 가능한 경관도로 브랜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경관도로 브랜딩 공모전 개최 예시

- (공모주제) 시민 눈으로 바라본 경관도로 브랜드 아이디어 경진대회
- (응모분야 1) 경관도로 브랜드명, 슬로건, 대표로고, 워드마크 등
- (응모분야 2) 경관도로 발굴(3개 루트 이상(1개 루트 제안 기준 : 최소 20km), 콘셉트 및 스토리)



가이드맵과 도로 표지판

8일간 코스제안

③ (경관도로 주변지역 경관 경쟁력 강화) 경관도로 주변의 시설물, 가로수, 식재 및 지형, 경관자원 홍보 등 경관도로의 체계적 관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도로경관 가이드라인 구성 및 주요내용 예시(안)

경관자원 경험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속차로 도입을 통한 지역경관 경험 극대화 • 경관도로 주변 관광지, 주요 경관자원, 전망대, 공공시설물 홍보 • 가상·증강현실(VR·AR·MR)등의 기술을 도입한 여행경험 제공 및 홍보
경관도로 식재 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변 주변 지형 복원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도로 주변 깎기 비탈면 관리 및 리운딩 처리 • 도로변 주변 식재용지 확보 및 가로수 관리 계획 • 조망과 주행경관을 고려한 식재계획
경관도로 시설물 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변 주변 시설물 통합 디자인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도로 표지판, 바닥사인, 관광지·문화재 안내표지판, 옥외광고물 등 • 공공건축가를 활용한 경관도로 주변 공공시설물 디자인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망데크, 화장실, 전망대, 포토존 등

④ (경관도로 주변 마을 특성화 사업 및 연계·협력 벨트 구성) 경관도로 인근마을의 경관을 정비하고 이와 연계한 체험, 숙박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계 네트워크 구축

1단계 거점 발굴 및 개발	2단계 연계 네트워크	3단계 주변 지역 연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하이라이트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루트 내 관광명소, 경관거점, 역사문화관광자원등 하이라이트 선정 • 주요 거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마을관리, 신규명소를위한경관및마을거점발굴, 디자인특화형시설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연계관광벨트 설정 및 브랜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도로 축을 중심으로 한 지역연계관광벨트 설정 - 관광벨트의 자원성격, 환경 등 특성을 고려한 테마브랜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지역연계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이 편리하게 주변지역으로이동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 구축 • 연계코스 및 관광상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루트에서 주변지역 명소 및 관광지 연계이용이 가능한 코스 제공



마을의 유희시설, 빈집 등 공간과 갈남마을박물관 운영시스템을 연계하여 마을호텔 '비밀숙소' 도입

6.2.3 우수한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산업경관 형성

- ① (산업단지 위해경관 파악 및 경관개선 시범사업 시행) 산업단지 주변 위해경관 현황을 파악하고, 경관개선을 위한 단계적 시행계획 마련
- 경관사업 모니터링단을 활용한 현황파악 및 노후 산업단지 또는 도시지역에 밀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색채디자인 사업 등 시범사업 추진

1단계	주요 사업 내용
산업단지 경관 모니터링 및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 시행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종사자 인식 조사 • 산업단지 주변 공간환경(가로, 공공공간, 경관) 실태조사 및 문제점 분석 • 산업단지 경관개선을 위한 추진 계획 수립
2단계	
산업단지 경관개선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환경 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정비, 담장보수, 보도정비 등 근거리 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 • 색채디자인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색채 정비 • 주요 경관거점 및 도로변 녹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도로변이나 경관거점에서 보이는 산업단지에 대한 원거리 시각적 차폐 증진

- ② (지역 경관을 고려한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기준 설정) 시·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 위해경관 경감 등을 고려한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기준 설정

*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40744판결)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일정 구역 내에는 태양광발전시설물을 짓지 못하도록 정한 ‘이격거리 규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이격거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군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임을 인정

- ③ (신재생에너지 경관지침 수립) 신재생에너지사업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시설 설치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지침 마련



출처: D.Apostol et al., (2016), The Renewable Energy Landscape: Preserving Scenic Values in our Sustainable Future(사진 왼쪽, 가운데), 윤호선(사진 오른쪽)

1. 중장기 추진계획

□ 정비단계 : 1차 건축기본계획 (2013~2017)

- 경상남도의 건축·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전략, 사업 및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단기·중기·장기의 단계적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건축정책 발전을 위한 기반 형성

□ 정착단계 : 2차 건축기본계획 (2021~2025)

- 1차 계획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여건변화와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을 고려한 건축정책의 중·장기적 실행력 제고

□ 확산단계 : 3차 건축기본계획 (2026~2030)

- 광역 건축기본계획 수립 10년간 파급효과가 높은 실천과제와 도민체감 우수 시범 사업을 중심으로 건축정책의 공공부분 역할 재구성 및 민간주도 환경 조성 단계

□ 지속단계 : 4차 건축기본계획 (2031~2035)

- 건축정책의 주요 아젠다를 도내 균형발전 유도, 도·농 상생 협력방안, 지역특화 등을 편성하여 경상남도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



[건축기본계획 중장기 추진계획]

2. 세부 추진계획

목표 1. 포용으로 다시 쓰는 경남 건축

실천과제	세부과제	단위과제
1.1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생활공간개선	1.1.1.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는 노인복지 향상 정책 마련	① 지역별 노인복지시설 분포현황 및 전수조사 ② 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 수립 ③ 경상남도형 스마트홈 보급
	1.1.2. 취약계층 주거 지원 및 문화사각지대 해소	①대학생청년 등 1인 가구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 추진 ② 산업단지 근로자 맞춤형 주거지원 ③ 청년친화 문화공간 '청년센터' 조성 확대 ④ 외국인 대상 문화·복지공간 조성 확대
	1.2.1. 건축안전기반 구축을 통한 재난안전 대비	① 노후공공건축물 분포지역 현황 및 실태조사 ② 민간 소유 건축물 안전점검 컨설팅 및 비용지원 ③ 경남 동부권 안전교육 체험시설 확충
	1.2.2. 디자인으로 만들어가는 안전한 건축·공간환경	① 경상남도 BF인증제 도입 ② 무장애 공공공간 시범사업 추진 ③ 경상남도 범죄취약지역 개선방안 연구 ④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2.1 노후·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활성화	2.1.1. 빈집 정책 실행체계 구축	① 빈집 특례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개정 ② 빈집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③ 경상남도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④ 시·군 빈집실태조사 추진 ⑤ 시·군 빈집정비계획 수립
	2.1.2. 빈집활용 기반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① 경상남도 빈집뱅크 신설 및 운영방안 마련연구 ② 농어촌 빈집 리모델링 숙박시설 지원사업 ③ 도민 빈집 실험학교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2.1.3. 유휴공간 활용 시범사업 및 프로젝트 추진	① 빈집 철거 및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주차장 확충 ② 폐교를 활용한 농·어·산촌 노인복지시설 확충 ③마을과 지역대학생이 함께 하는 자투리땅 살리기 프로젝트
	2.2.1. 거점 공공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SOC 복합화	① 「경상남도 생활SOC 확충계획」 수립 연구 ② 생활SOC 복합화 시범사업 추진 ③저이용 공공건축물 유휴공간을 활용한 복지·편의공간 확보
	2.2.2. 전통시장 연계 지역문화 거점공간 확충	①전통시장 매개의 지역문화 거점 연계 활용계획 수립 ②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원도심 도시재생 시범사업
	2.2.3. 다양한 발주방식 도입을 통한 우수디자인 창출	①지역건축사 대상 노후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제안공모 ② 소규모 공공건축물 간이설계공모

주관부처	협조부처	추진시점				
		'21	'22	'23	'24	'25
도 건축주택과	도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도 건축주택과	도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도 건축주택과, LH	도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도 건축주택과, LH	시·군 담당부서					
도 건축주택과, LH	한국산업단지공단					
도 건축주택과	청년정책추진단, 시·군 담당부서					
도 건축주택과	시·군 담당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도 건축주택과	시·군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경상남도건축사회					
도 건축주택과	-					
도 건축주택과	-					
도 건축주택과	시·군 담당부서					
도 건축주택과	연구기관					
도 건축주택과	시·군 담당부서					
도 건축주택과	-					
도 건축주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시·군 담당부서					
도 건축주택과	한국감정원 등 대행기관					
시·군 담당부서	한국감정원 등 대행기관					
시·군 담당부서	한국감정원 등 대행기관					
도 건축주택과	연구기관					
시·군 담당부서	LH·경남개발공사, 도시재생기업, 민간직능업체					
도 건축주택과	경상남도 총괄·공공건축가, 건축사(가)회					
시·군 담당부서	-					
시·군 담당부서	-					
도 건축주택과	경상남도 총괄·공공건축가					
도 건축주택과	연구기관					
도 건축주택과	시·군 총괄·공공건축가					
시·군 담당부서	시·군 총괄·공공건축가					
도 도시계획과	시·군 담당부서, 도시재생지원센터, 경남발전연구원					
시·군 담당부서	중소기업벤처부, 민간기업					
도 건축주택과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도 건축주택과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목표 2. 기술과 산업변화에 유연한 건축생태계 구축

실천과제	세부과제	단위과제
3.1 경남형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스마트·녹색 건축물보급	3.1.1. 경남형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선도 강화 ② 소규모 노후주택 에너지성능 지원 계획 수립 ③ 지역 커뮤니티시설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3.1.2.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	①태양광 잠재발전 용량 분석 및 설치가능 지역 파악 ②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결합형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
	3.1.3. 제로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시범사업 발굴	①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대응체계 구축 ②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추진
3.2 기후변화에 적응력을 갖춘 건축·공간환경 조성	3.2.1.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상남도 농산어촌 조성	① 재해·재난 대피시설 취약지역 파악 ② 지역 커뮤니티 시설 안전성능 진단 ③무더위쉼터 기능 확대를 통한 ‘우리동네 방재쉼터’ 조성
	3.2.3. 폭염, 홍수 등 하절기 이상기후 대책 마련	① 하절기 이상기후 유형별 취약 건축물 파악 ② 건축물 차양설치 및 우수활용 권장 ③ 지역맞춤형 옥상녹화 및 쿨루프 사업 지원
4.1 경상남도 미래 건축시장의 경쟁력과 다양성확보	4.1.1. 건전한 건축설계시장 환경 구축을 위한건축사사무소 실태조사 실시	① 지역 신진건축사 및 우수건축가 현황 파악 ② 경상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4.1.2.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① 건축시장 창업지원 프로그램 시범 운영 ②지역 대학교와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지정
	4.1.3. 지역건축가 및 우수건축 업체 홍보와 업무범위 확대	① 지역 우수건축가 활용계획 수립 ② 우수건축 설계·시공 업체 정보제공 플랫폼 개발 ③ 건축사사무소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4.2 효율적인 건축행정기반 구축	4.2.1.경상남도 건축지원센터 설립	① 경상남도 건축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② 경상남도 건축지원센터 운영방안 마련 ③ 경상남도 건축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
	4.2.2.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① 총괄 및 공공건축가제도 세부운영계획 수립 ②총괄 및 공공건축가제도 활용 매뉴얼 작성 및 배포 ③ 시·군 건축직 공무원 워크숍 정기 개최 ④ ‘경상남도 공공건축 포럼’ 기획 및 추진

주관부처	협조부처	추진시점				
		'21	'22	'23	'24	'25
도 건축주택과, LH	시·군 담당부서					
도 건축주택과, LH	시·군 담당부서					
도건축주택과, 시·군 담당부서	-					
도건축주택과, 에너지산업과	시·군 담당부서					
도건축주택과, 에너지산업과	시·군 담당부서					
도건축주택과, 에너지산업과	시·군 담당부서					
도 건축주택과, LH	시·군 담당부서					
도건축주택과, 재난대응과	시·군 담당부서					
도건축주택과, 재난대응과	시·군 담당부서					
도건축주택과, 재난대응과	시·군 담당부서					
도건축주택과, 재난대응과	시·군 담당부서					
도 건축주택과	시·군 담당부서					
도 건축주택과	시·군 담당부서					
도 건축주택과	경남건축사(가)회					
도 건축주택과	경남건축사(가)회					
도 건축주택과	시·군 담당부서					
도 건축주택과	도내 대학					
도 건축주택과	경남건축사(가)회					
도 건축주택과	시·군 담당부서					
도 건축주택과	경남건축사회					
도 건축주택과	경남건축사회, 연구기관					
도 건축주택과	경남건축사회, 연구기관					
도 건축주택과	-					
도 건축주택과	-					
도 건축주택과	시·군 담당부서					
도 건축주택과	시·군 담당부서					
도 건축주택과	경남건축사(가)회					

목표 3. 공감하고 체감하는 일상 속 건축문화 실현

실천과제	세부과제	단위과제	
5.1 건축자산의 체계적 보존과 진흥을 위한 기틀 마련	5.1.1. 건축문화 아카이브 관리·운영 고도화	① 기 구축한 근대건축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계획 및 활용방안 수립	
		② 건축문화자산 유형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③ 건축문화 관련 홍보 플랫폼의 일원화 ④ 도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마련	
	5.1.2.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	① 건축자산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②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종합관리계획 수립 ③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5.2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자산과 한옥의 자원화	5.2.1. 건축자산의 관광·문화 상품화를 통한 활용 확대	① 도시재생·SOC 사업과 연계한 건축자산 자원화 구상 ② 민간소유 건축자산 보존을 위한 민간소유주 지원 방안 마련 ③ 건축문화자산의 관광 활성화	
		5.2.2. 한옥 및 목조건축의 현대적 활용을 통한 한옥·목조건축 문화 확산	① 한옥 및 건축자산 전수조사 시행 ② 도내 한옥 및 목조 공공건축물 건립 ③ 기존 한옥매입을 통한 공공한옥 활용 ④ 한옥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한옥체험업 인센티브 제도 구축
6.1 건축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행사 및 교육 확대	6.1.1. 건축문화 행사·축제 및 건축도시 관련사업의 주민 참여 활성화	① 경남건축문화제 기획 및 운영 안정화 방안 마련 ② 경남건축문화제 콘텐츠 다양화 및 도민 참여 확대 ③ 지역 사업과 연계한 찾아가는 경관교육 시범사업	
		6.1.2. 연령대별 건축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① 초·중·고등학생·시니어 대상 건축문화 교육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② 기초교육 과정과 연계한 건축문화 교육 협정 ③ 민간건축주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6.2 문화와 경관이 어우러지는 경상남도 장소 형성	6.2.1.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경관 사업시행 및 체감도 증진	① 눈이 편안한 도시만들기 사업(가칭) ② 경관 개선을 위한 도민참여 시스템 마련 ③ 시민 중심의 경관사업 모니터링으로 지역 경관 개선	
		6.2.2. 지역경관자원의 가치 발굴 및 연계협력 사업 추진	① 경상남도 경관도로 발굴 및 선정 ② 경관도로 브랜딩 공모전 개최 ③ 경관도로 주변지역 경관조성 및 경쟁력 강화 ④ 경관도로 주변 마을 특성화 사업 및 연계·협력 벨트 구성
			6.2.3. 우수한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산업경관 형성

주관부처	협조부처	추진시점				
		'21	'22	'23	'24	'25
도 건축주택과	도 관광진흥과, 시·군 담당부서					
도 건축주택과	시·군 담당부서					
도 건축주택과	경남건축사(가)회					
도 건축주택과	시·군 담당부서					
도 건축주택과	시·군 담당부서					
도 건축주택과	도 건축위원회, 시·군 담당부서					
도 건축주택과	시·군 담당부서					
도 건축주택과	시·군 담당부서					
도 건축주택과	도 관광진흥과, 시·군 담당부서					
도 건축주택과	시·군 담당부서, 연구기관					
도 건축주택과	시·군 담당부서					
도 건축주택과	시·군 담당부서					
도 건축주택과	도 관광진흥과, 시·군 담당부서					
도 건축주택과	경남건축사회					
도 건축주택과	경남건축사회					
도 도시계획과	시·군 담당부서					
도 건축주택과, 시·군 담당부서	통합교육추진단, 대학, 초·중·고 학교, 건축사(가)회, 평생교육진흥원					
도 도시계획과	경상남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시·군 담당부서					
도 건축주택과	시·군 담당부서, 경상남도 건축사(가)회					
시·군 담당부서	-					
도도시계획과, 시·군 담당부서	도 건축주택과					
도도시계획과, 시·군 담당부서	도 건축주택과					
도 도시계획과	도 건축주택과					
도 도시계획과	도 건축주택과					
도도시계획과, 시·군 담당부서	도 건축주택과, 도로과, 시·군 담당부서					
도도시계획과, 시·군 담당부서	도 건축주택과, 도로과, 시·군 담당부서					
도도시계획과, 시·군 담당부서	도 산업단지정책과, 시·군 담당부서					
도에너지산업과, 시·군 담당부서	도 건축주택과					
도 도시계획과	도 에너지산업과					

3. 지자체별 추진계획

□ 추진배경

- 경상남도의 다양한 자연환경, 지역발전 잠재력 및 한계점, 지자체별 중점사업, 국비확보 가능사업 등을 반영하는 맞춤형 건축정책 추진전략 필요
- 건축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실시한 도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전문가 TF회의, 도청 실무자면담, 시·군 건축직 간부 워크숍 등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자체별 중점 정책요소 제안
- 본 내용은 시·군별로 건축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우선 세부단위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필수적으로 이행해야하는 사항은 아님

□ 공통 추진과제 도출

- 세부 단위과제별 지자체 선호도는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사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시급하다고 판단
- 따라서 세부단위과제 중 지자체 참여도가 높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는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공통적으로 우선 추진하고, 그 외 과제는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

□ 공통 선행과제

- (전략1, 실천과제 1.1)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생활공간 개선사업의 세부단위과제인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는 노인복지 향상 정책 마련’
- (전략 2, 실천과제 2.1) 노후,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활성화 사업의 세부단위과제인 ‘빈집 정책 실행체계 구축’, ‘빈집활용 기반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유휴공간 활용 시범사업 및 프로젝트 추진’
- (전략4, 실천과제 4.2) 효율적인 건축행정기반 구축 사업의 세부단위과제인 ‘경상남도 건축지원센터 설립’,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전략6, 실천과제 6.2) 문화와 경관이 어우러지는 경상남도 장소형성 세부단위 과제인 ‘지역경관자원의 가치 발굴 및 연계협력 사업 추진’

□ 지자체별 중점과제

전략	실천	세부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1	1.1	1.1.1	⊙	⊙		⊙	○	○		○	⊙	○	⊙	⊙	⊙	○		⊙		○	
		1.1.2		⊙		○	⊙	⊙				○		⊙	⊙	○					⊙
	1.2	1.2.1	○	○	○		⊙		○						○				○	○	○
		1.2.2	○	○	○				⊙		⊙	⊙	○	○	○	○			○	○	
2	2.1	2.1.1	⊙	⊙	○	⊙	⊙	⊙	⊙	○		○	⊙	⊙	⊙	⊙	○		⊙	⊙	
		2.1.2	⊙		○	⊙	⊙	⊙	⊙	⊙	⊙	○	○	⊙	⊙	⊙	○		⊙	⊙	
		2.1.3	⊙		○	⊙	⊙	⊙	⊙	⊙	⊙	○	○	⊙	⊙	⊙	○		⊙	⊙	
	2.2	2.2.1				○				○						○	⊙	⊙	⊙		○
		2.2.2				○	○									○	⊙	⊙	⊙		○
		2.2.3		○	⊙		⊙			⊙		○				○					
3	3.1	3.1.1	⊙	○		○	○		○		○	○							○	○	
		3.1.2	○	○		○			⊙	○	○	○	⊙		⊙				○	○	○
		3.1.3	○						○	○	○	○			⊙				⊙	○	
	3.2	3.2.1	⊙			○	○	○		⊙				○			○				○
		3.2.2		○				○		⊙				⊙			○				○
4	4.1	4.1.1	○		○		⊙		⊙	○				⊙	⊙	○	○	○		○	
		4.1.2	⊙		○	⊙	⊙		⊙				○	⊙	⊙	○	○	○		○	
		4.1.3	⊙		○				⊙	⊙			○	⊙		○	○	⊙		○	
	4.2	4.2.1	⊙	○	⊙	○	○	⊙	⊙	○	○	⊙		○	⊙		○	○	○	○	○
		4.2.2	⊙	○	⊙	⊙	⊙	○	⊙	⊙	⊙	○	⊙	○	⊙	○	○	○	⊙		○
5	5.1	5.1.1	○					⊙			○	○					○	○	○	○	
		5.1.2		○				⊙	○		○					⊙		○	○		
	5.2	5.2.1	○	○	⊙		○	⊙	○	⊙	○				⊙	⊙		○	○	⊙	
		5.2.2	○	○		○	○	⊙		⊙	○					○		○	○	⊙	
6	6.1	6.1.1				○		⊙	⊙		○			○	⊙	○			○		
		6.1.2		○		○	⊙	○	⊙	○	○				⊙	⊙	○			○	○
	6.2	6.2.1	⊙	○		○		○	○					○	○				○	○	⊙
		6.2.2	⊙	⊙	○	○	○	○	○	○	○			⊙	○	○	○		○	○	⊙
		6.2.3																			

※ 실천과제 6.2의 6.2.3은 시군 워크숍 이후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신규 과제로 발굴

4. 성과관리 계획

□ 성과관리 계획의 개요

-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천과제별로 면밀한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필요
-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중 경상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건축정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기본계획의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체계 마련
- (조사대상) 건축기본계획 실천과제별 담당실국 및 실과
 -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기획조정실, 재난안전건설본부, 산업혁신국,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청년국, 도시교통국 등
- (조사방법) 연구용역 발주를 통한 성과관리 기관 선정으로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계획 작성지침과 조사 양식을 마련하고, 실천과제별 담당공무원에 배포하여 과제관리 카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취합하여 성과보고서 작성
 - 과제현황, 성과 및 실적, 예산계획 및 소요예산, 연차별 추진실적 및 계획 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과제관리카드 양식을 마련하고 이를 배포하여 과제담당자에게 작성토록 함



[그림 6-114] 건축기본계획 성과관리 계획

□ 성과관리카드 예시

[건축주택과-1]

실천과제	
세부과제	
단위과제	

담당	① 실국				
	② 실과	전(前)부서			현(現)부서
	③ 이전 담당자	담당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관		
④ 현재 담당자		주관			
		협조			

과제 현황	⑤ 현황	<input type="checkbox"/> 진행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변경	계획 추진기간	실제 추진기간
		<input type="checkbox"/> 중단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⑥ 과제 내용					
⑦ 분류		<input type="checkbox"/> 법·제도 제·개정	<input type="checkbox"/> 계획수립	<input type="checkbox"/> 사업 지원 및 추진		
		<input type="checkbox"/> 연구용역	<input type="checkbox"/> 지침 및 기준마련	<input type="checkbox"/> 시범사업 공모 및 추진		
		<input type="checkbox"/> 교육시행	<input type="checkbox"/> 기타 ()			

과제 성과	⑧ 성과 및 실적						
	⑨ 근거 자료	<input type="checkbox"/> 고시 및 공고	<input type="checkbox"/> 연구용역 및 보고서	<input type="checkbox"/> 법·제도 지침			
		<input type="checkbox"/> 보도자료	<input type="checkbox"/> 계획 및 보고자료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⑩ 예산계획 및 소요예산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단위:억원